

각국 예산안 분석

- I. 미 국
- II. 캐나다
- III. 일 본
- IV. 프랑스
- V. 독 일
- VI. 영 국
- VII. 호 주



I. 미 국

□ FY2011 : 2010.10 ~ 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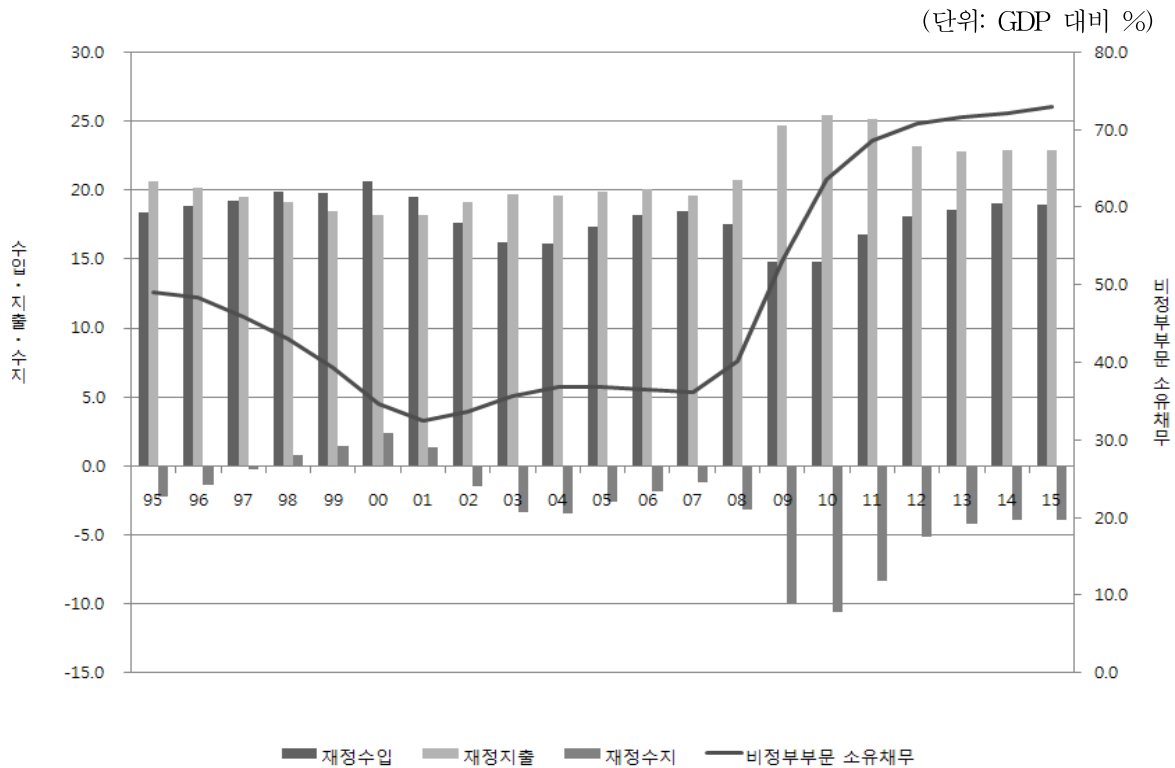
□ 출처 : Fiscal Year 201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0.2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 환율(2009년 평균) : 1USD = 1276.4원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14조 3,694억달러(우리나라의 10.7배)

[그림 I-1] FY2011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 주: 1.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는 회계연도 기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연말기준
-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 3. 1995~2009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09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로 전환되고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 지속 전망
- (재정전망)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는 대폭 감소(FY2010 대비 18.6%) 전망

◇ 예산기조: 높은 수준의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일자리 창출
- ② 경기부양정책 지속 추진
- ③ 재정건전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1 재정수입은 FY2010년 대비 18.6% 증가한 2조 5,670억달러 전망
- 총지출규모 3조 8,340억달러로 편성된 FY2011 예산안은 미래 대비 전략투자로서 교육 및 R&D 예산을 증액하고, 국방·대테러 등 국가안보 지출 확대

◇ 주요 재정정책

- 고용촉진·지원 및 경기회복 정책
 -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의 관련 정책 연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재정건전화
 - 재정위원회 설립,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운영 개선 방안 등과 함께 PAYGO원칙 도입 및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²⁾

- '09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로 전환되고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 지속 전망
 - 주택 및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 및 기업의 경기체감 지수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
 - 산업생산지수 및 개인소득의 개선 역시 경기호전 전망을 뒷받침
 - * 산업생산지수('10.1월 발표, 2002=100): ('09.7월) 96.9 → ('09.8월) 98.3 → ('09.9월) 98.9 → ('09.10월) 99.1 → ('09.11월) 99.7 → ('09.12월) 100.3
 - * 실질개인소득('10.2월 발표, 전분기 대비 변화율): ('09:1Q) Δ 3.2% → ('09:2Q) Δ 0.9% → ('09:3Q) Δ 0.3% → ('09:4Q) 0.3%

- 다만, 경기회복의 기세가 미약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을 이룰 전망
 - 실업률은 경기회복의 속도가 완만함에 따라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 높은 실업률과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국채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겠으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평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제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표 I-1> FY2011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¹⁾	- 2.5	2.7	3.8	4.3	4.2	4.0	3.6	3.2	2.8	2.6	2.5	2.5
CPI(CPI-U) ¹⁾	- 0.3	1.9	1.5	2.0	2.0	2.0	2.0	2.0	2.1	2.1	2.1	2.1
실업률 ²⁾	9.3	10.0	9.2	8.2	7.3	6.5	5.9	5.5	5.3	5.2	5.2	5.2
금리												
91일 만기 국채 수익률 ³⁾	0.2	0.4	1.6	3.0	4.0	4.1	4.1	4.1	4.1	4.1	4.1	4.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3	3.9	4.5	5.0	5.2	5.3	5.3	5.3	5.3	5.3	5.3	5.3

주: 1) 전년 대비 %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 증대로 재정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Y2010('09.10월~'10.9월)의 재정수입은 FY2009 대비 2.9% 늘어난 2조 1,651억달러(GDP의 14.8%)* 전망

* FY1950(재정수입이 GDP의 14.4%) 이래 최저 수준

○ FY201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2조 5,672억달러(GDP의 16.8%) 전망

○ 이후 FY2011~FY2015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9.1% 증가하고, FY2015~FY2020에는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FY2010 재정지출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5.8% 증가한 3조 7,210억달러(GDP의 25.4%) 전망

- FY2011에도 재정지출은 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인 GDP의 25.1% (3조 8,340억 달러, FY2010 대비 3% 증가) 전망
 - FY2011~FY2015 동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FY2015~FY2020에는 연평균 5.4% 증가 전망
- (재정수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로 FY2010 재정수지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악화될 전망이나,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FY2010 재정적자는 1조 5,560억달러(GDP 대비 10.6%)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FY2011 재정적자는 1조 2,670억달러(GDP 대비 8.3%)로 FY2010 대비 18.6% 감소 전망
- (국가채무)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 FY2010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9조 2,980억달러로 GDP 대비 63.6%, FY2011에는 10조 4,980억달러(GDP의 68.6%)에 이를 전망
 -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지급 규모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 * 순이자지출 전망(GDP 대비, %): (FY2010)1.3 → (FY2011)1.6 → (FY2012)2.1 → (FY2013)2.5 → (FY2014)2.8 → (FY2015)3.0

<참고 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채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표 1-2> FY2011 예산안 재정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지출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재정적자	1,556	1,267	828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9,298	10,498	11,472	12,326	13,139	13,988	14,833	15,686	16,535	17,502	18,573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지출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재정적자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63.6	68.6	70.8	71.7	72.2	72.9	73.6	74.2	74.9	75.9	77.2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참고 2> CBO 경제 및 재정전망('10.1월)

- (경제전망)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을 전망
 -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약화
 - 가계소비 역시 소득증가율 감소, 자산손실, 대출자격 악화 등으로 제약을 받을 전망이며, 투자지출도 높은 부동산 재고로 인해 둔화될 전망

<표 1-3>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2014 ¹⁾	2015-2020 ¹⁾
실질 GDP ²⁾	2.2	1.9	4.4	2.4
CPI-U ²⁾	2.4	1.3	1.2	1.9
실업률 ³⁾	10.1	9.5	6.5	5.0
금리 ³⁾				
91일 만기 국채수익률	0.2	0.7	2.9	4.6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3.6	3.9	4.5	5.5

주: 1) 연평균

2) 전년 대비, % 변화율

3) 연평균, %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 (재정전망) 현 정책 유지시 FY2009 이후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FY2014 이후로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

○ FY2010 재정적자는 1조 3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보다 650억달러 감소한 수치, FY2008 재정적자의 3배 수준

○ FY2011 재정수지는 경기회복, 조세조항 기한만료, 경기부양정책 관련 지출감소로 9,800억달러(GDP의 6.5%)의 재정적자 전망

<표 1-4> 재정전망¹⁾

(단위: GDP 대비 %)

	2009 ²⁾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입	14.8	14.9	17.8	18.8	19.3	19.7	19.7	19.8	19.9	20.0	20.1	20.2
재정지출	24.7	24.1	24.3	23.0	22.5	22.4	22.3	22.6	22.6	22.6	23.1	23.3
재정수지	-9.9	-9.2	-6.5	-4.1	-3.2	-2.7	-2.6	-2.7	-2.6	-2.6	-3.0	-3.0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0 to 2020, CBO, 2010.1월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 FY2011 예산안은 높은 수준의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① 일자리 창출
- ② 경기부양정책 지속 추진
- ③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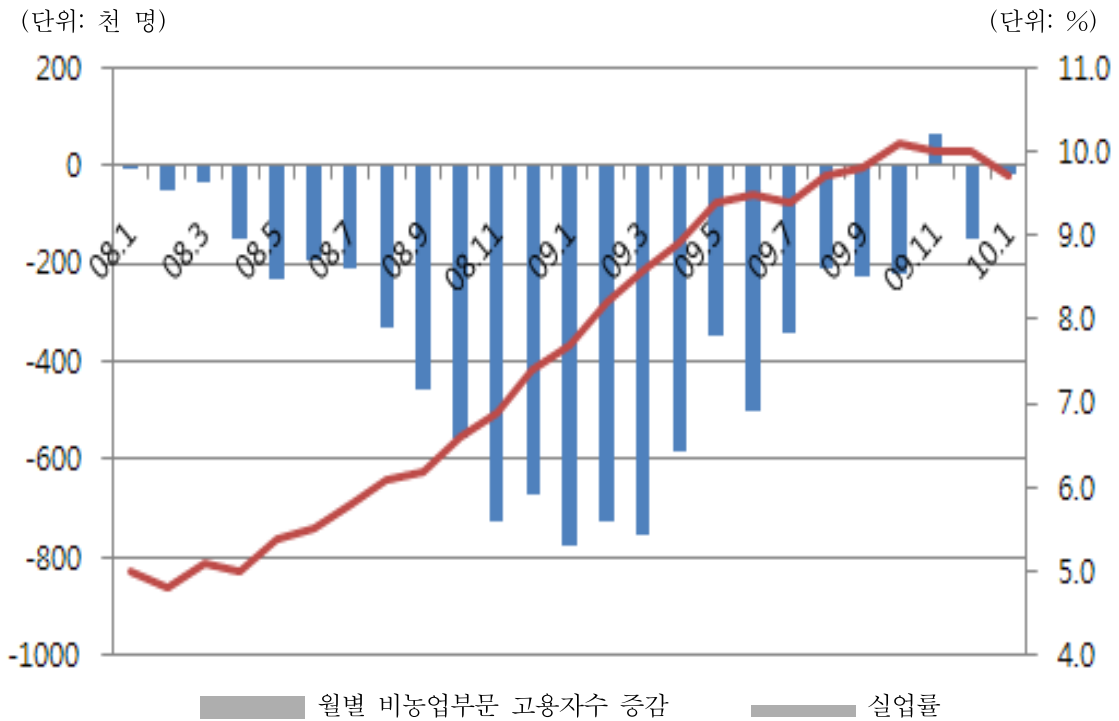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³⁾의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09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이 (+)로 전환되고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ARRA)의 일부 관련 조항을 연장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 현재 의회에서 입법 진행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예산배정 및 추가적 실업 대책*을 마련

*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예산지원, 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Finance Fund) 신설 등

3)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그림 1-2] 고용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 (재정건전화)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재약속
 -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및 3년간 비안보 재량 지출 동결, 의료보험·실업급여 등의 부당수취 방지, 세원의 투명한 조달 제고 등을 제안
 - 예산제도적 측면에서는 PAYGO원칙 도입과 행정부가 의회 승인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참고 3>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관하여 의회에 폐지요청을 하는 것으로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재원폐지 제안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의 수정 및 토론 제한 등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0 총재정수입은 FY2009보다 601억달러(2.9%) 증가한 2조 1,651억달러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의 증가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세(payroll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증가 전망
 -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이익금(기타 수입으로 분류) 증가 역시 FY2010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

- 지속적인 경기회복 가정하에 FY2011 재정수입은 FY2010년보다 4,021억달러(18.6%) 증가한 2조 5,672억달러 전망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 책임금 부과,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독신 20만달러)의 고소득자에 대한 2001, 2003년 감세법 종료 등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기대
 - FY2011 재정수입은 GDP 대비 16.8%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p 증가할 전망

<표 1-5>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인소득세	915	936	1,121	1,326	1,468	1,604	1,733	1,856	1,980	2,102	2,223	2,338
법인세	138	157	297	366	393	445	411	449	463	473	486	502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사회보장 급여세	654	635	674	720	766	809	856	911	954	1,000	1,044	1,084
의료보험(Medicare) 급여세	191	180	192	208	223	237	251	267	280	293	307	318
실업보험	38	51	60	67	73	77	79	79	78	77	76	77
기타 퇴직연금	8	9	8	9	9	9	9	9	9	9	9	10
소비세	62	73	74	81	85	87	88	89	90	90	91	92
유산세 및 증여세	23	17	25	23	24	26	28	30	32	35	37	40
관세	22	24	27	32	35	37	39	42	44	47	49	5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34	77	79	67	59	52	48	50	52	55	57	59
일자리 창출 대책	-	-12	-25	-8	-3	-2	-	-	-	-	-	-
의료보험 개혁	-	-	16	18	39	58	74	86	93	101	110	119
기타 수입(연방준비제도 이익금 제외)	18	18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총재정수입	2,105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GDP 대비 %	148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주: 1) 확정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나. 분야별 예산

- (교육)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재량지출 예산을 FY2010 대비 6.2% 증액
 - 주/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교육개선사업(Race to the Top*)에 13.5억달러 배정
 - * 주요 내용: 학업성취도 기준 상향조정 지원, 교사 능력 및 우수교사의 공평한 배정 제고,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통계 사용,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성과제고
 - 작년 예산안에 이어 학자금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OMB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2011~2020) 433억달러 절감 효과 예상
 - Pell Grant 장학금 역시 작년에 이어 최대 수혜액을 CPI+1%로 연동 조정할 것을 제안
 - 이에 따라, FY2011 Pell Grant 장학금 상한액은 160달러 인상된 5,710달러
 - Pell Grant 장학금을 현행 재량지출과 법정지출의 혼합 운영 시스템에서 법정지출로 전환할 것을 제안
 - 향후 10년간 Pell Grant 장학금 인상분 686억달러는 학자금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상쇄

- (R&D 및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및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증액한 반면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Constellation program)은 중단
 - 핵심 기초연구를 관할하는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의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예산 증액
 - 국립과학재단 예산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4억달러, 에너지부 과학국에는 4.6% 증가한 51억달러,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는 7.0% 증가한 9억달러 배정
 -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Constellation program) 중단

-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종료(cf. FY2010 예산권한 규모 35억달러)
- 국립보건원(NIH)의 FY2011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21억달러
 - 증액된 예산은 계몽, 생의학 연구 등에 지원될 것이며, 특히 암과 자폐증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

□ (국가안보) 국방 및 대테러 관련 예산 확대

- (국방예산) 일반군사 활동에 5,738억달러(전년 대비 3.5% 증가)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전략수행 등 해외 군사작전 비용으로 1,593억달러(전년 대비 2.3% 감소)를 의회에 요청
 - (일반군사 활동) 국방부가 5,489억달러, 핵무기 관련 활동으로 에너지부 178억달러, 기타 안보활동(FBI, 해안경비대 등)에 70억달러 배정
 - (해외 군사작전 비용)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사용될 해외 군사작전 비용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증원*을 감안하여 요청

<참고 4>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증원

- '09.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올 상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고 '11.7월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
 - FY2010 추경으로 요청한 330억달러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3만명 이상 증파하여 올 상반기까지 10만명으로 증원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
 - FY2011 예산안에서 요청한 해외전비 1,593억달러도 '11.7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10만명 수준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가정하여 편성

- (국토안보부) 항공보안에 대한 추가 재원 배정 등 국토안보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10.5% 증가

<표 1-6> 국방예산(기능별 지출)

(단위: 예산권한, 십억달러)

	2010	2011	증감	비중(%)
재량지출:				
일반군사 활동(해외 군사작전 비용 제외)				
국방부	530.8	548.9	18.2	3.4
원자력 활동	16.6	17.8	1.2	7.2
기타 국방관련 활동	6.7	7.0	0.3	4.2
일반군사 활동 소계	554.1	573.8	19.6	3.5
해외 군사작전 비용				
승인 규모(현재)	130.0	-		
2010 추정	33.0	-		
2011 예산	-	159.3		
해외 군사작전 비용 소계	163.0	159.3	-3.7	-2.3
재량지출 총계	717.1	733.1	16.0	2.2
법정지출	5.0	5.6	0.6	12.3
총국방예산(해외 군사작전 비용 제외)	559.1	579.4	20.3	3.6
총국방예산(해외 군사작전 비용 포함)	722.1	738.7	16.6	2.3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표 1-7>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09 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782	855	895	827	811	825	845	882	885	907	931	955
비안보	437	553	520	475	456	457	465	475	486	497	511	529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219	1,408	1,415	1,301	1,267	1,283	1,310	1,337	1,371	1,405	1,442	1,484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678	715	730	762	801	845	888	945	1,002	1,064	1,130	1,201
메디케어	425	451	491	501	556	623	662	724	757	791	881	953
메디icaid	251	275	297	274	292	313	336	362	389	419	451	487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51	-73	11	10	7	6	3	1	*	*	-	-
일자리 창출 대책	-	12	25	8	3	2	-	-	-	-	-	-
의료보험 개혁	-	6	-7	-17	2	30	72	101	100	100	104	10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07	737	619	570	547	546	544	563	567	568	616	637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2,112	2,123	2,165	2,107	2,208	2,364	2,500	2,606	2,815	2,942	3,182	3,384
순이자(Net interest)	187	188	251	343	436	510	571	627	681	733	786	840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	1	3	4	4	4	5	5	5	5	5	5
총재정지출	3,518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GDP 대비 %	247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주: * 5억달러 이하

1)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에 대한 잠정 배정액. 이와 같은 지원은 재량지출이나 법정지출, 세금감면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편의상 지출에 포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표 1-8>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재원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규모	예산요청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 기관:						
Defense(DOD)	530.8	548.9	566.4	581.8	597.8	616.0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9.9	11.2	11.6	11.9	12.4	12.9
Homeland Security(DHS)	39.4	43.6	44.2	44.8	45.3	46.7
Veterans Affairs	53.1	57.0	59.7	61.3	63.0	64.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50.6	58.5	65.7	69.0	71.2	73.6
안보 기관 합계	683.7	719.2	747.5	768.7	789.7	814.0
비안보 기관:						
Agriculture	25.0	23.9	24.6	24.5	25.2	26.0
Commerce	13.9	8.9	9.1	8.8	8.5	8.8
Education	46.8	49.7	50.1	50.2	51.4	52.7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제외)	16.5	17.1	17.1	17.2	17.7	18.3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84.1	83.5	82.4	80.7	83.1	85.5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3.6	41.6	41.3	42.0	44.1	45.3
Interior	12.2	12.0	11.9	11.8	12.2	12.5
Justice	27.5	24.1	28.5	28.0	29.0	29.9
Labor	14.3	14.0	13.5	13.1	13.3	13.5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76.0	77.6	79.2	80.6	82.1	84.7
Treasury	13.6	13.9	14.1	14.5	15.1	15.9
Corps of Engineers	5.4	4.9	4.7	4.6	4.7	4.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0.3	10.0	9.4	8.8	8.6	8.5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6	0.7	0.6	0.6	0.6	0.7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8.7	19.0	19.4	20.0	20.6	21.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9	7.4	7.8	8.3	8.9	9.5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8	1.0	1.0	0.9	0.9	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3	10.1	10.5	10.9	11.4	11.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	1.4	1.7	2.0	2.3	2.6
Other Agencies	19.4	20.2	19.2	18.6	19.1	19.5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392.1	386.4	437.1	399.4	416.0	428.7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재원 합계	446.3	441.3	446.4	446.2	459.1	472.3

<표 1-8>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재원(계속)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규모	예산요청				
기타 재량지출 재원:						
해외 군사작전 비용:	130.0	159.3	50.0	50.0	50.0	50.0
Defense	129.6	159.1	50.0	50.0	50.0	50.0
Homeland Security	0.2	0.3	-	-	-	-
Justice	0.1	-	-	-	-	-
기타 추경 승인액/ 긴급자금	0.4	-	-	-	-	-
Agriculture	0.4	-	-	-	-	-
Other Agencies	*	-	-	-	-	-
FY2010 추경 요청액	41.1	-	-	-	-	-
Defense(해외 군사작전 비용 포함)	33.0	-	-	-	-	-
Homeland Security	3.6	-	-	-	-	-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5	-	-	-	-	-
재량지출 예산권한 총합	1247.3	1265.0	1234.6	1218.1	1255.7	1292.6
재량지출 예산재원 총합	1301.5	1319.8	1243.9	1264.9	1298.8	1336.2

주: * 5천만달러 이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4. 주요 재정정책

FY2011 예산안은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재정건전화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가. 고용촉진·지원 및 경기회복 정책

-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ARRA)의 관련 정책 연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감세, 신용 가용성 확대, 인프라 투자, 실업자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활용

- (경기부양법 일부 조항 연장) '09.2월 제정된 경기부양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
 - 실직가구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실업급여 확대(490억달러 지원4)
 - COBRA 의료보험* 대상자의 보험료 보조 정책 연장(87억달러)
 - 중소기업 사업자 및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연계 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 2011년까지 연장(612억달러)
 -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 상향조정 및 보너스 감가상각 적용기한 1년 연장 (FY2010~FY2011년: 388억달러)
 - 선진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산투자에 대해 2011 과세연도까지 30%의 세액공제 제공
 - * 선진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세액공제 대상: 태양·풍력·지열 에너지 생산,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 설치·확장

4) 이후 제시된 소요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FY2011 예산안의 정책 제안으로 인한 FY2010~FY2020까지의 재정상의 총비용

<참고 5>

COBRA 의료보험 및 경기부양법(ARRA)하의 COBRA 보험료 보조 정책

실직 등으로 의료보험을 잃은 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1985년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법 제정.

경기부양법(ARRA)에서는 COBRA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의료보험료를 65% 인하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 자격조건은 '08.9월부터 '10.2월까지 비자발적인 고용의 종료로 인해 의료보험을 상실하여야 하며 보험료 인하는 '09.2.17일 이후 최대 15개월까지 적용

- (일자리 창출 대책 법안)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1천억달러 배정
 - * '09.12월 하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법안(Jobs for Main Street Act of 2010)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
 - FY2011 예산안에서는 지출과 수입에 각각 500억달러씩 총 1천억달러를 잠정배정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 가능

- (신규 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에 배정한 1천억달러 이외에 FY2011 예산안에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
 -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09.2.17일 이후 발행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5년 이상의 장기 보유 주식 매도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81억달러)
 - * 현행법: 자본이득세의 50% 공제, 경기부양법(ARRA): 75% 공제
 -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R&E credit) 영구화(857억달러)
 - 중소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SBA) 7(a)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175억달러 요청
 - 무역증진을 위해 상무부의 국제무역행정국의 예산을 20% 증액하고 기타 수출관련

기관의 예산을 증액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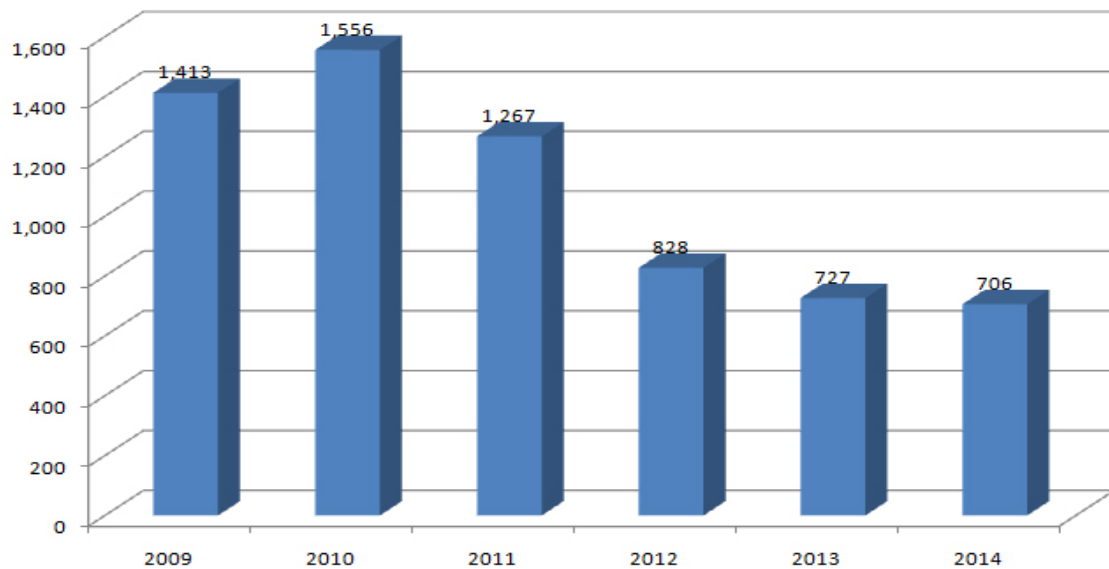
- 지역 및 국가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and Finance Fund)을 신설하여 FY2011에 40억달러 배정(5년간 250억달러)

나. 재정건전화

-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 재정위원회 설립,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재정사업 운영 개선방안 등과 함께 PAYGO 원칙 도입 및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 (적자 감축)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정적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재약속

[그림 1-3] FY2011 예산안 재정적자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재정위원회 설립*)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재정위원회 설립
 - (중기적 과제) FY2015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을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
 - (장기적 과제) 복지부문 법정지출(entitlement spending)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검토

<참고 6> 재정위원회 설립

- '10.1월 상원에서는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안을 부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재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임을 언급
- '10.2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초당적 성격의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 구성) 재정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오바마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얼스킨 볼스(민주당)**와 **앨런 심슨(공화당)** 전 상원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 대통령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6명을 임명하고,
 - 나머지 12명은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선출
 - 상원 민주/공화 각각 3명, 하원 민주/공화 각각 3명
 - (보고서) 위원회는 FY2015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 방안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
 - 재정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총 18명의 위원 중 14명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

* 안보기관에 속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훈처,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 기타 관련 국제협력 계정을 제외한 재량지출

- 다만, 동 제안은 정부기관의 모든 회계계정을 일률적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중요도가 높은 정책과제는 증액될 수 있는 반면, 중요도가 낮은 재정사업은 삭감하여 총계 수준에서 비안보 재량지출 분야를 동결한다는 의미

<표 1-9> 기관별 재량지출

(단위: 예산재원,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규모	요청				
안보기관	683.7	719.2	747.5	768.7	789.7	814.0
비안보기관	446.3	441.3	446.4	446.2	459.1	472.3

주: 1. 해외 군사작전 비용, 긴급자금 제외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 (재정사업 운영 개선) 국가 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FY2010 예산안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음 4개 분야에 증액 지원

- 사회보장국(SSA)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의료보험 부정수령 및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령 축소
- 국세청(IRS)을 통한 세법집행 강화

→ OMB는 상기 4개 분야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320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PAYGO 원칙 적용) '10.2월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PAYGO 원칙은 신규 법정지출이나 세입감소 정책에 대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출감소 혹은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 동 원칙에 위배되었을 시에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PAYGO원칙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법정지출 프로그램에 일률적인 삭감 조치 시행

□ (신속재원폐지 규정 제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 2. 예산기조 편에 서술된 <참고 3> 참조

- 대통령에게 의회가 승인한 재원에 대해 개별 조항을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예산안에 제시된 제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원폐지 요구의 항목 수를 제한하여 의회에 송달할 수 있으며,
 - 의회는 재원폐지 제안에 대한 신속한 가부투표(up-or-down vote) 필요
- 재원폐지 제안은 재원의 축소나 폐지만 가능하며, 이로 인한 재원 절감분에 대해 대통령은 재원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없음
- 하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표결하며,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도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없이 원안에 대해 표결

II. 캐나다

□ FY2010-11: 2010.4~2011.3

□ 출처

○ The Budget 2009(2009.01.27): <http://www.fin.gc.ca/fin-eng.html>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09.09):

<http://www.fin.gc.ca/access/statement-eng.asp>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 (4차보고서, 2009.12.02):

<http://www.fin.gc.ca/pub/report-rapport/2009-4/index-eng.asp>

※ 캐나다의 경우 현재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음. 보통 2월에 예산안이 발표되나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작년 9월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자료를 위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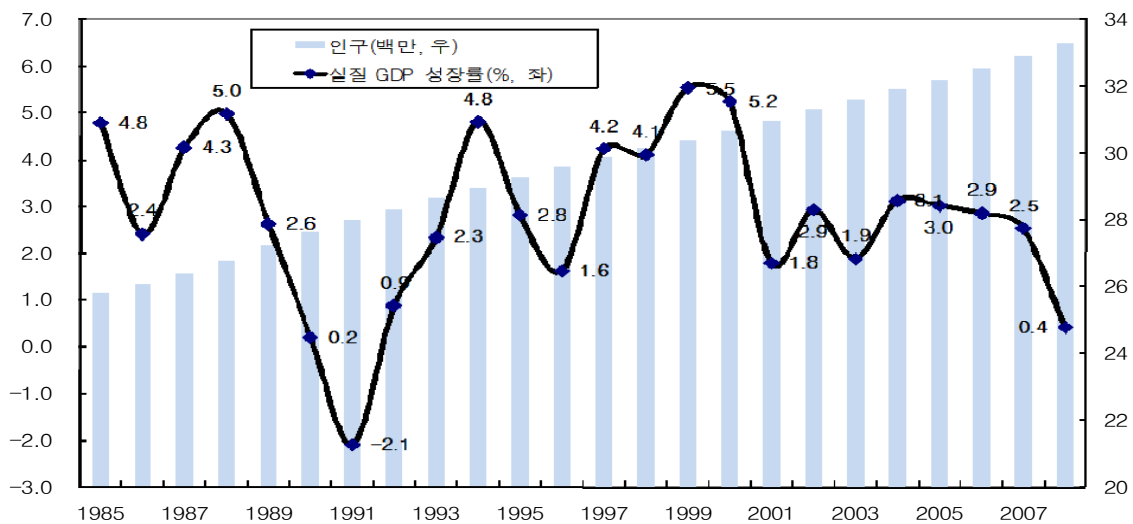
□ 환율: 1캐나다달러 = 약 1,118.9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08년 경상GDP 1조 3,002억달러(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08년 기준 68.7%(우리나라 107.0%)

□ 인구: 3,332.7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2009.09)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3%로 전망되나 '1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9.0%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총지출은 2,784억캐나다달러로 재정적자

◇ 예산기조

- 향후(보통 2월) Budget2010에 발표될 예정임

◇ 예산안 내용(2009.09)

- (세입)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4.7%
- (프로그램지출) FY2010-11 프로그램지출은 2,447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5.4%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FY2009-10의 경기부양 예산 280억캐나다달러 중 약 97%가 집행되었음
- CEAP을 통해서 12,000개의 프로젝트가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8,000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FY2010-11까지 4,000개 프로젝트가 새로이 진행될 예정)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특별한 정책 없음
- (고용정책)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2년간 실업지원으로 약 70.2억캐나다달러(FY2009-10 28.7억캐나다달러, FY2010-11 41.5억캐나다달러)지원,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129.8억캐나다달러(FY2008-9 5.3억캐나다달러, FY2009-10 64.7억캐나다달러, FY2010-11 59.8억캐나다달러)를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2009.9)

가. 경제전망

- (실질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3%로 전망
 - '10년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은 미국(2.0%)보다 0.3%p 높게 전망
 - '11년 3.2%, '12년 3.3%, 2010-14년 평균 2.9%를 기록할 전망

- (명목GDP 증가율) '10년 명목GDP 증가율은 4.1%로 전년 대비 8.7%p 상승
 - '11년 5.3%, '12년 5.6%, 2010-14년 평균 5.1%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1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9.0%를 기록할 전망
 - 연초예산안 전망보다 1.3%p 상향 조정함 (7.7%('09년 1월 전망치)→ 9.0%)
 -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함께 서서히 감소하여 '11년 8.5%, '12년 7.8%, '15년 6.5%를 기록할 전망

- (물가) '10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1.8%로 전년보다 1.3%p 상승
 - '11년 2.0%, '12년 2.1%, 2010-14년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

<표 II-1> 경제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4
Re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8	2.4	3.4	3.1	2.9	2.6		2.9
August 2009 private sector	-2.3	2.3	3.2	3.3	3.0	2.7	2.7	2.9
GDP inflation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4	1.7	2.2	2.3	2.1	2.1		2.1
August 2009 private sector	-2.3	1.8	2.0	2.3	2.2	2.2	2.2	2.1
Nomin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1.2	4.2	5.7	5.5	5.0	4.7		5.0
Budget 2009 fiscal planning	-2.7	4.3	6.4	6.1	5.3	5.0		5.4
August 2009 private sector	-4.6	4.1	5.3	5.6	5.3	5.0	4.9	5.1
Unemployment rate								
January 2009 private sector	7.5	7.7	6.9	6.4	6.2	6.1		6.6
August 2009 private sector	8.5	9.0	8.5	7.8	7.1	6.8	6.5	7.8
Consumer Price Index (CPI) inflation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7	1.9	2.1	2.1	2.0	2.0		2.0
August 2009 private sector	0.5	1.8	2.0	2.1	2.1	2.1	2.0	2.0
U.S. re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1.8	2.1	3.5	3.2	3.0	2.7		2.9
August 2009 private sector	-2.6	2.0	3.2	3.8	3.5	3.2	3.0	3.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0-11 45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2.8%)의 적자 기록 전망
 -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총지출은 2,784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은 2,447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337억캐나다달러)로 재정적자 발생
 - GDP 대비 재정수지는 경기회복과 함께 FY2011-12 -1.6%, FY2012-13 -1.1%, FY2013-14 -0.6%, FY2014-15 -0.3%로 서서히 회복될 전망

<표 II-2>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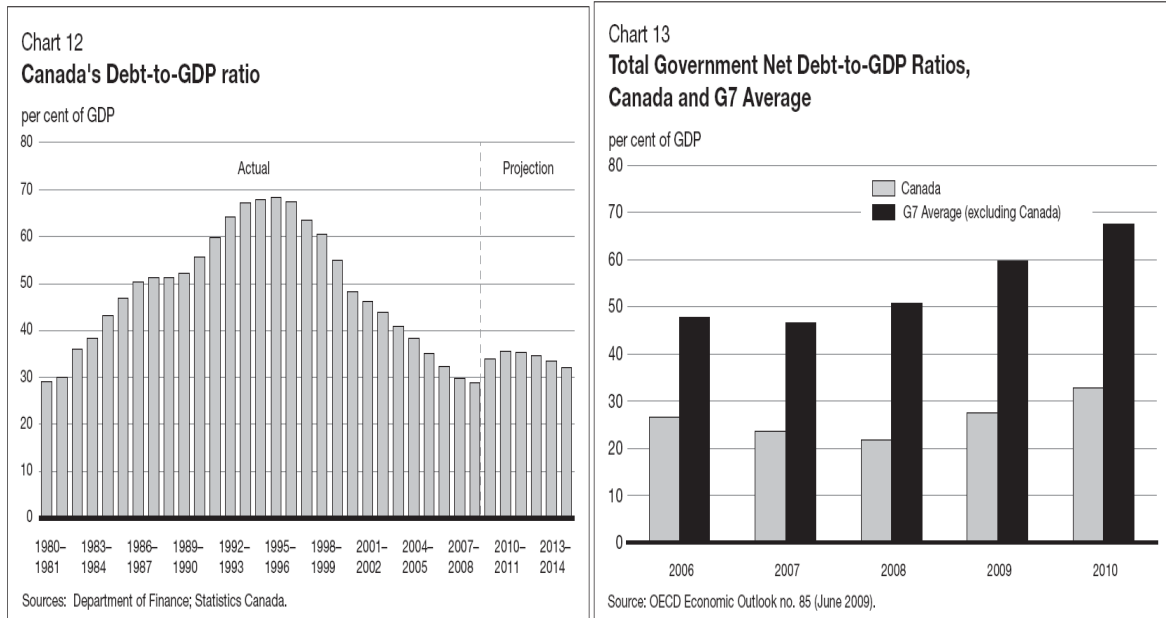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세입	2,331	2,166	2,331	2,509	2,687	2,847	2,982
프로그램지출	2,079	2,419	2,447	2,406	2,468	2,539	2,614
이자지출	310	307	337	377	412	421	420
총지출	2,388	2,725	2,784	2,783	2,881	2,960	3,034
재정수지	-58	-559	-453	-274	-194	-112	-52
정부부채	4,637	5,196	5,649	5,923	6,117	6,229	6,281
세입	14.6	14.2	14.7	15.0	15.2	15.3	15.3
프로그램지출	13.0	15.8	15.4	14.4	14.0	13.6	13.4
이자지출	1.9	2.0	2.1	2.3	2.3	2.3	2.1
재정수지	-0.4	-3.7	-2.8	-1.6	-1.1	-0.6	-0.3
정부부채	29.0	34.0	35.5	35.4	34.6	33.5	32.1

- (부채) FY2010-11 부채는 5,64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5.5%)로서 연초 예산안에 비해 2.4%p 상향조정
 - 연초예산안 대비 부채비율을 2~5%p 상향조정하여 FY2011-12 35.4%, FY2012-13 34.6%, FY2013-2014 33.5%, FY2014-15 32.1%로 예상
 - 연초예산안보다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순부채 비중은 G7

국가의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II-1] GDP 대비 부채비중 비교



2. 예산기조 (Budget 2009, 2009.01)

※ Budget 2010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작년 가을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자료에는 예산기조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Budget 2009의 기조로 대체함

□ 캐나다의 Budget 2009년 기조 : Economic Action Plan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 국민에게 세제 및 일자리 지원 혜택(세제혜택, 고용보험 기술교육지원 확대, 고급인력 지원프로그램, 고용보험 동결 등)
- ③ 주택시장 부양 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3. 예산안 내용 (2009.09)

가. 세입내역

- (개인소득세) FY2010-11 개인소득세는 1,17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7.4%)로 전년 대비 84억캐나다달러 증가
 - 경기회복과 더불어 개인소득세 또한 증가하여 FY2014-15에는 1,506억캐나다달러 까지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0-11 법인세는 26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6%)로 전년 대비 23억캐나다달러 증가
 -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증가하여 FY2014-15 339억 캐나다달러로 점차 증가할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0-11 재화 및 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는 27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7%)로 전년 대비 13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점차 증가하여 FY2014-15 338억캐나다달러에 이를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관련 수입은 17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1%)로 전년 대비 8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4-15 고용보험수입은 26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로 증가할 전망

<표 II-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 - 14	2014-15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160	1,087	1,171	1,245	1,333	1,417	1,506
법인세	295	238	261	292	299	321	339
기타소득세	63	46	54	58	63	68	70
총소득세(A)	1,518	1,371	1,487	1,594	1,696	1,806	1,914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57	258	271	285	304	320	338
관세	40	34	35	36	38	40	41
기타소비세	100	100	98	99	99	100	100
총소비세(B)	398	392	403	420	441	460	479
총조세수입(C=A+B)	1,916	1,763	1,890	2,014	2,137	2,265	2,393
고용보험(D)	169	164	172	194	220	247	261
기타세입(E)	246	239	269	301	330	335	327
총세입(F=C+D+E)	2,331	2,166	2,331	2,509	2,687	2,847	2,982
개인소득세	7.3	7.1	7.4	7.4	7.5	7.6	7.7
법인세	1.8	1.6	1.6	1.7	1.7	1.7	1.7
재화 및 용역세	1.6	1.7	1.7	1.7	1.7	1.7	1.7
총조세수입	12.0	11.5	11.9	12.0	12.1	12.2	12.2
고용보험	1.1	1.1	1.1	1.2	1.2	1.3	1.3
기타세입	1.5	1.6	1.7	1.8	1.9	1.8	1.7
총세입	14.6	14.2	14.7	15.0	15.2	15.3	15.3

나. 세출내역

- (노후혜택) FY2010-11 노후혜택(Elderly Benefits)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69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노령인구 증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FY2014-15에는 45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2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이러한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평균 임금의 상승으로 최대 보장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FY2011-12년부터 실업이 감소하여 FY2014-15년 고용보험관련 지출은 179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보조금) FY2010-11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은 12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억캐나다달러 상승
 - 향후 계속 상승하여 FY2014-15 13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이러한 아동보조금 지출 증가는 Budget2009에서 발표한 캐나다 자녀세금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제도 및 국가아동혜택(National Child Benefit) 제도 확대 때문임

-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Health and Social Programs) 지출은 FY2010-11 372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6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이 확대되어 FY2014-15에는 44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ities and Communities) 지원으로
FY2014-15까지 매년 20억캐나다달러 지원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사람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34	352	369	390	411	434	455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¹)	163	221	220	192	184	176	179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19	122	125	128	130	133	134
소계	616	695	715	709	726	742	768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33	356	372	387	407	427	447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52	162	164	168	176	186	195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0	-28	-30	-32	-34	-36	-38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0	20	20	20	20	20	20
기타		8	34	18			
소계	465	518	560	561	569	597	623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02	295	309	328	333	333	337
크라운기업(Crown Corporations)	81	76	76	76	76	76	76
기타발생비용(Other operating expenses)	615	648	684	720	754	780	804
기초지출(Underlying Spending)	998	1020	1,069	1,124	1,164	1,190	1,217
경기부양(Economic Action Plan)	0	187	103	11	10	10	6
소계	998	1207	1,172	1,135	1,174	1200	1,223
총프로그램지출	2,079	2,419	2,447	2,406	2,468	2,539	2,614
사람에 대한 주요 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3.8	4.6	4.5	4.2	4.1	4.0	3.9
기타 정부 주요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2.9	3.4	3.5	3.4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6.2	7.9	7.4	6.8	6.6	6.4	6.3
총프로그램지출	13.0	15.8	15.4	14.4	14.0	13.6	13.4

4. 주요 재정정책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 (4차 보고서, 2009.12.02))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 FY2009-10의 경기부양 예산 280억캐나다달러 중 약 97%가 집행되었음
 - 캐나다 국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30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실업자 지원에 29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일자리 창출 85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6%,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17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1%,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에 118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8%를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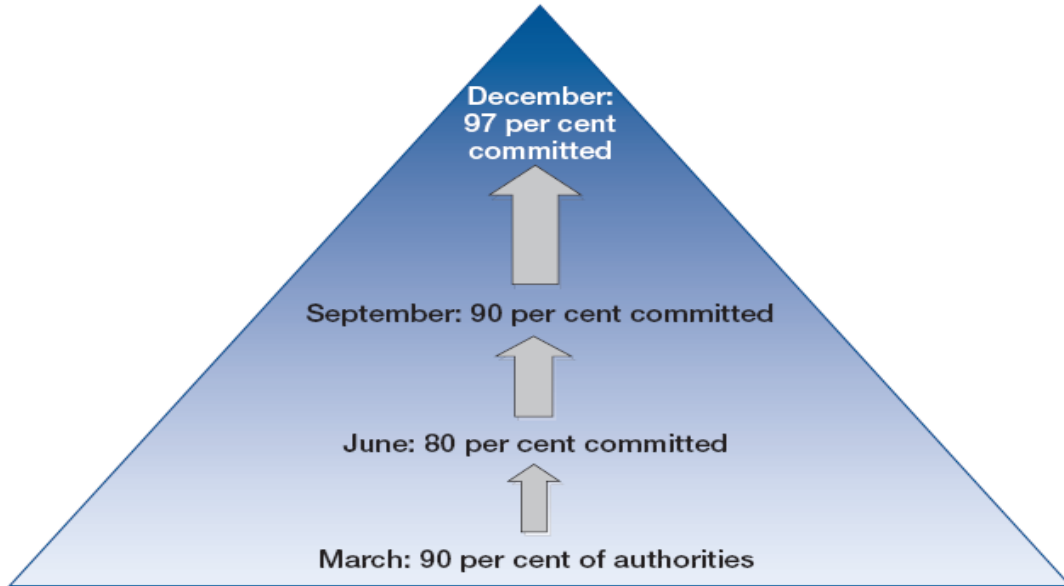
<표 II-5> FY2009-10 경기부양액 및 집행비중

(단위: 억캐나다달러, %)

	경기부양액	집행비중
조세부담 경감	30	100
실업 지원	29	100
일자리 창출	85	96
향후 경제 발전	17	91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18	98
총계	280	97

- 경기부양책 CEAP의 진행과정
 - 1차보고서(2009.03): FY2009-10 예산의 90%의 권한을 확정
 - 2차보고서(2009.06):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80% 집행
 - 3차보고서(2009.09):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90% 집행
 - 4차보고서(2009.12):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97% 집행

[그림 II-2] CEAP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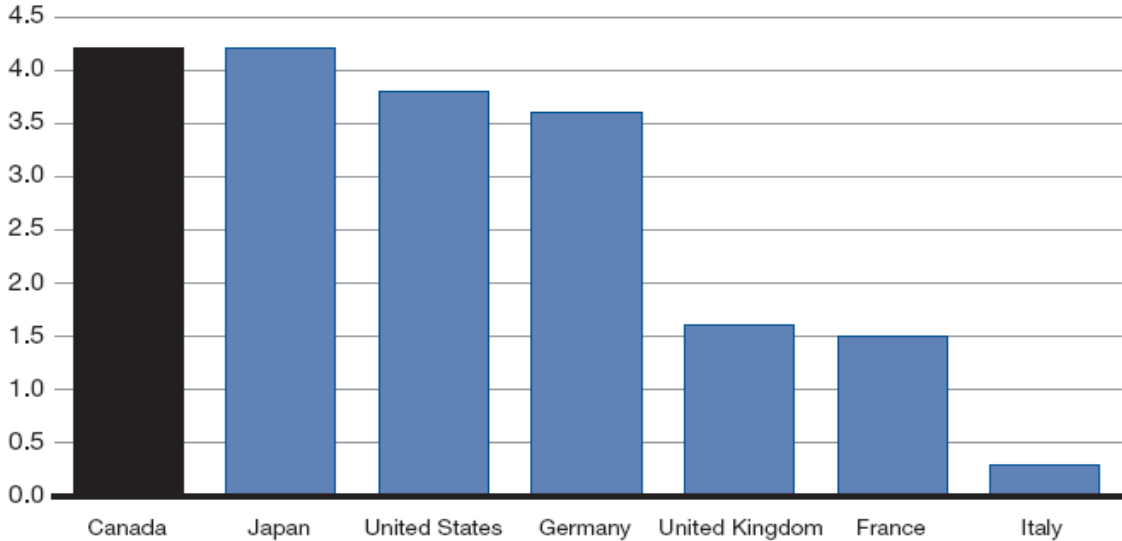


- CEAP을 통해서 12,000개의 프로젝트가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
 - 8,000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FY2010-11까지 4,000개 프로젝트가 새로이 진행될 예정
 - 향후 근로자들의 교육 제공 확대, 기반시설 강화(Infrastructure Projects), 사회주거 시설(Social Housing) 확장 등을 추진 예정임

- 2009년과 2010년 CEAP를 통해 집행한 캐나다의 경기부양지출규모는 G7국가 중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4% 이상임
 - 미국과 독일은 GDP 대비 3.5% 이상, 영국과 프랑스는 약 1.5%, 이탈리아는 G7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0.5% 이하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투입

Fiscal Stimulus Flowing in 2009 and 2010, G7 Countries

per cent of GDP



Notes: IMF estimates exclude loans, including those to the auto sector, for all countries. Figure for Canada includes provincial-territorial stimulus in addition to that assumed in the Economic Action Plan as estimated by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Source: IMF, *Update on Fiscal Stimulus and Financial Sector Measures*, April 26, 2009, p. 5.

나. 재정건전화

- 캐나다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예전 정책들: 정책지출관리제도('79년 도입), 지출통제법('92년 도입), 프로그램검토('94년 도입), 지출관리시스템('95년 도입)
 - 이러한 정책으로 캐나다 재정수지는 FY1997-98~FY2007-08까지 재정흑자를 기록하였고, '90년대 중반 GDP 대비 부채는 약 70%에서 FY2008-09 28.6%까지 하락하였음

다. 고용촉진·지원

□ (실업률) '09년 실업률은 미국보다 1.0p% 낮은 8.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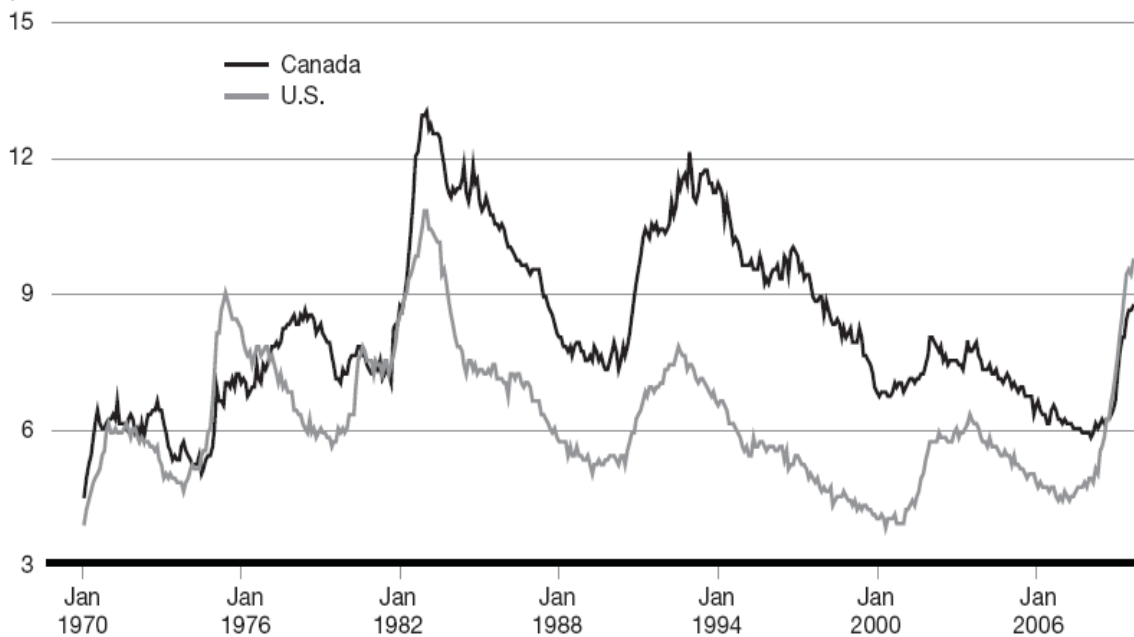
- 실업률은 90년대 중반 약 12.0%에서 '07년 6.0%로 낮아졌으나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소폭 증가하여 '09년 8.5%

[그림 II-3] 캐나다와 미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Unemployment Rate

per cent



Sources: Statistics Canad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실업지원) 경기부양(CEAP)의 일환으로 2년간 실업 지원으로 약 70.2억캐나다 달러(FY2009-10 28.7억캐나다달러, FY2010-11 41.5억캐나다달러) 지원

-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FY2009-10 11.2억캐나다달러, FY2010-11 15.5억캐나다달러 지원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FY2009-10 9.4억캐나다달러, FY2010-11 9.7억캐나다달러 지원

- 낮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유지를 위해 FY2009-10 8.2억캐나다달러, FY2010-11 16.3억캐나다달러 투입
- '10년 고용보험료율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득 100캐나다달러당 1.73캐나다달러로 동결하였음

<표 II-6> 실업지원(FY2009-10~FY2010-11)

(단위: 억캐나다달러)

	FY2009-10	FY2010-11	총계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	11.2	15.5	26.7
교육기회 확대	9.4	9.7	19.1
낮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유지	8.2	16.3	24.5
총계	28.7	41.5	70.2

□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CEAP)의 일환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129.8억캐나다달러(FY2008-9 5.3억캐나다달러, FY2009-10 64.7억캐나다달러, FY2010-11 59.8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총 160.0억캐나다달러임

- 기반구축을 위해 71.9억캐나다달러,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57.9억캐나다달러 지출

<표 II-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FY2008-10~FY2010-11)

(단위: 억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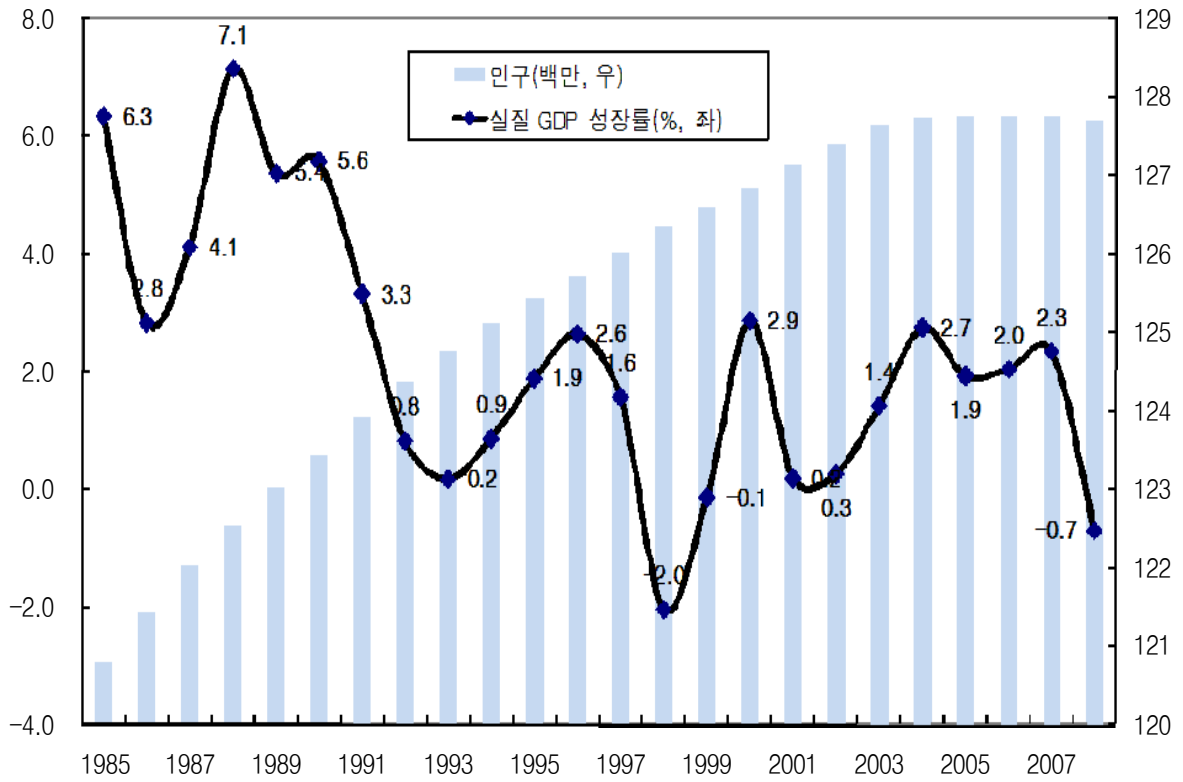
	FY2008-09	FY2009-10	FY2010-11	총계
기반구축(Building Infrastructure)				
지방·영토 및 도시 기반투자		19.0	40.5	59.4
캐나다 원주민 기반투자		2.3	2.8	5.2
연방 기반 프로젝트 투자		4.8	2.5	7.3
소계(A)		26.0	45.8	71.9
주택건설 활성화(Stimulating Housing Construction)				
주택부문 지원	5.3	28.4	3.5	37.2
사회주거 투자		10.3	10.5	20.8
소계(B)	5.3	38.7	14.0	57.9
총계(A+B)	5.3	64.7	59.8	129.8
총기대효과		85.0	75.0	160.0

Ⅲ. 일 본

- FY2010: 2010. 4 ~ 2011. 3
-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09. 6.3 FY2010예산 편성의 기본적 사고 발표
 - 2009. 7.1 FY2010예산요구 지침 각의 양해
 - 2009. 9.29 신정부, FY2010예산안 편성방침 결정(7.1자 지침 폐지)
 - 2009. 10.16 각 부성 예산안 요구서 접수
 - 2009. 11.26 각 부성 예산안 요구서 및 정책평가조서 발표
 - 2009. 12.15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
 - 2009. 12.25 FY2010예산안 각의 결정
 - 2010. 1.22 FY2010예산안 변경(각의 결정) 및 국회제출
 - 2010. 1.29 FY2010예산안 국회심의 개시
- 출처:
 - 平成22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2009.9.29)
 - 予算編成の基本方針(2009.12.15)
 - 平成22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09. 12.25)
 -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2009.12.25)
 - 平成22年度予算説明資料 (2009.12.25)
 - 平成22年度の鳩山總理冒頭發言 (2009.12.25)
 - 平成22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の変更(2009.1.22)
 - 平成22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1算の説明(2009.1.29)
- 환율: 100엔 = 약 1,363.13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08년 경상GDP 4조 3,583억달러(우리나라 3.2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08년 기준 34.7%(우리나라 107.0%)

□ 인구: 1억 2,769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0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전환 및 2009년중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등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
 - 그러나 엔고, 디플레이션, 고용 및 소득여건 악화, 기업투자 부진 등은 여전히 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 2010년 재정수지는 2009년 중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여파로 GDP 대비 -8.2%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민주당 신정부가 총선 당시 내세운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보호(To protect people’s daily lives)에 예산기조 아래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예산편성의 3대 개혁)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이념 실천을 위한 예산 마련, 정치권 주도의 예산 편성체제 구축, 사업구분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화 등 예산편성의 개혁 단행
- (정책공약 이행) 일본 신정부의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양육, 고용, 환경, 과학·기술 등에 대한 3.1조엔 규모의 예산 마련
- (탄력적 경기 대응) 향후 경제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조엔 규모의 경기대책관련 예산 배정
- (중장기 전략 마련) 국민생활 보호와 연계된 경제성장과 함께 재정규율이 양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

◇ 예산안 내용

- FY2010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7.3조엔(13.1%) 감소한 48.0조엔 수준

- FY2010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신정부의 정책공약(manifesto) 이행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3.8조엔(4.2%) 증가한 92.3조엔 수준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 경제침체 완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56.8조엔 규모의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14.7조엔 규모의 FY2009 1차 추경 편성
- 고용악화 타개를 위해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긴급고용지원에 중점을 둔 「긴급고용대책」 발표
-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에 대응하고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24.4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7.2조엔 규모의 FY2009 2차 추경 편성

- 재정건전화

- 2010년중 중장기적 재정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

- 고용촉진·지원

- 일본정부는 ‘긴급 지원 조치’ 및 ‘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긴급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FY2010 예산안에 1.2조엔 규모의 예산 투입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전환 및 2009년중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등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
 - 경기부양책의 효과, 수출회복, 재고조정 등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고, 고용 및 소득여건 악화, 기업투자 부진 등은 여전히 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 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급감 및 엔고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고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확산
 - 이에 따라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2.6% 정도로 추정되며, 2010년 일본 경제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1.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3년 만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

- 일본정부는 경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FY2009년중 세 차례에 걸친 81.2조엔(재정지출 22.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추진중
 - 일본정부는 2009년 주로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해소, 미래 성장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4월 「경제위기대책」, 10월 「긴급고용대책」, 12월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대응책을 마련
 - 이러한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해 1~2차 추경예산 편성 및 2010년 세제개정을 추진하고 FY2010 예산안에 경제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조엔 규모의 경기대책 예비비 등을 편성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 분	2008	2009	2010
	실적	추정	전망
국내총생산(실질)	- 3.7	- 2.6	1.4
민간최종소비지출	- 1.8	0.6	1.0
민간주택투자	- 3.7	- 16.9	4.4
민간설비투자	- 6.8	- 16.5	3.1
재화·서비스 수출	- 10.4	- 14.4	8.3
재화·서비스 수입	- 4.4	- 11.1	5.2
내수기여도	- 2.6	- 2.2	1.1
민간	- 2.3	- 3.2	1.3
공공	- 0.3	1.0	- 0.2
외수기여도	- 1.1	- 0.5	0.4
노동 및 고용			
취업자 수	- 0.3	- 0.5	0.2
고용자 수	- 0.6	- 1.8	0.3
실업률	- 0.1	- 1.3	0.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 12.7	- 11.2	8.0
물가			
생산자물가지수	3.2	- 5.4	- 0.9
소비자물가지수	1.1	- 1.6	- 0.8
GDP 디플레이터	- 0.5	- 1.7	- 1.0
국제수지			
수출	- 16.3	- 23.3	6.6
수입	- 3.9	- 28.5	6.0
경상수지(조엔)	12.3	14.0	15.8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09.12.25.

나. 재정전망

□ 2010년 재정여건은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의 여파로 더욱 악화될 전망

○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의 여파로 GDP 대비 8.2%를 기록할 전망

○ 국가채무는 신정부의 예산 효율화 노력, 신규 국채발행 억제 방침 등에도 불구하고 44.3조엔 규모(GDP 대비 134.0%)에 달할 전망

- 2009년의 경우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신규 국채발행이 급증하여 53.5조엔(GDP 대비 126.9%)으로 추정되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조엔)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적			추정	전망
총수입	34.5	33.5	34.4	34.2	32.9
총지출	36.2	36.0	37.1	41.6	41.1
재정수지	- 1.6	- 2.5	- 2.7	- 7.4	- 8.2
구조적 재정수지	- 2.1	- 3.5	- 3.5	- 6.3	- 7.2
신규 국채발행액(조엔)	27.5	25.4	33.2	53.5	44.3
국채 의존도 ¹⁾	33.7	31.0	39.2	52.1	48.0
국채잔고	104.1	105.0	114.0	126.9	134.0

주: 1) 국채의존도 = 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OECD, Economic Outlook(86호), 2009.12.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2009.12.25

2. 예산기조

민주당 신정부가 총선 당시 내세운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 보호(To protect people’s daily lives)에 중점을 두어 ① 예산편성의 3대 개혁 ② 정책공약 이행 ③ 탄력적 경기 대응 ④ 중장기 전략 마련 등 세부적 재정기조를 제시

- (예산편성의 3대 개혁)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이념 실천을 위한 예산 마련, 정치권 주도의 예산 편성체제 구축, 사업구분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화 등 예산편성의 개혁 단행
 -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 이념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공공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
 -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실 주도로 예산의 기본방침, 정책공약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각료위원회나 3당 협의 또는 관계장관 등에 의한 절충 등을 거치는 정치 주도의 예산 편성 실시⁵⁾
 - 세제개정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와 당으로 이원화되었던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정치가만으로 구성된 세제조사회를 신설하여 세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부여
 -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事業仕分け)’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사업의 중복성 및 존치여부 등 검토의 전체 과정을 국민 공개로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증진

- (정책공약 이행) FY2010 예산안은 일본 신정부의 정책공약(「3당 정권연립 합의서」 포함)이행을 위해 자녀양육, 고용, 환경, 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둔 총 3.1조엔 규모의 예산 마련

5) 기존에는 재무성 주도로 원안을 작성하고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왔음

- 정책공약상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 소요액은 2013년까지 총 16.8조엔 규모인데 이 중 FY2010 일반회계 집행규모는 3.1조엔(아동수당 지급 1.7조엔, 농가소득 보상 0.6조엔, 고교 수업료 무상화 0.4조엔 등) 수준
 - 동 재원은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 및 해당 사항 반영 결과에 따라 확보된 3.3조엔(공익법인 기금 반납 1조엔, 예산요구단계에서 세출 삭감 및 절감 2.3조엔)으로 충당할 계획
- (탄력적 경기 대응) 엔고 지속 및 디플레이션 등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 우려에 따라 경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경제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2조엔 규모(일반회계 세출총액의 2.2%)의 경기대책관련 예산 배정
- FY2010 예산안에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1조엔 신설, 비특정 의결 국고 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엔을 편성
- (중장기 전략 마련) 국민생활 보호와 연계된 경제성장과 함께 재정규율이 양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
- FY2010 예산안을 시작으로 2010년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국민생활 보호 관점에서 고용, 환경, 자녀양육, 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둔 중장기 신경제성장 전략 마련 예정
 - 이와 함께 재정규율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 안정을 고려한 중기재정의 기본구조를 책정하고 중장기적 재정규율 실정을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

3. 예산안 내용

□ FY2010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92.3조엔으로 예산안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

<표 III-3> FY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십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비교증감액	증감률
	추정(A)	전망(B)	(B-A)	(%)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6,103.0	37,396.0	- 8,707.0	- 18.9
기타 수입	9,151.0	10,600.2	1,449.2	15.8
국채발행	33,294.0	44,303.0	11,009.0	33.1
계	88,548.0	92,299.2	3,751.2	4.2
세 출				
국채비	20,243.7	20,649.1	405.3	2.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573.3	17,477.7	904.4	5.5
일반세출	51,731.0	53,454.2	1,723.3	3.3
FY2007결산 적자보전	-	718.2	718.2	-
계	88,548	92,299	3,751.2	4.2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政府案」, 2009.12.25

가. 세입내역

□ FY2010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9년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7.3조엔(13.1%) 감소한 48.0조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안 대비 법인세 4.6조엔(43.5%) 감소 및 소득세 3.0조엔(19.0%)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7조엔(18.9%) 감소한 37.4조엔 수준으로 전망

<표 III-4> FY2010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십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예산(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2,661	10,223	10,154	-2,507	-19.8	-69	-0.7
신고소득세	2,911	2,541	2,460	-451	-15.5	-81	-3.2
(소득세 계)	(15,572)	(12,764)	(12,614)	-2,958	-19.0	-150	-1.2
법인세	10,544	5,175	5,953	-4,591	-43.5	778	15.0
상속세	1,522	1,280	1,271	-251	-16.5	-9	-0.7
소비세	10,130	9,381	9,638	-492	-4.9	257	2.7
주 세	1,420	1,420	1,383	-37	-2.6	-37	-2.6
담배세	8,430	817	827	-16	-90.2	10	1.2
회발유세	2,628	2,663	2,576	-52	-2.0	-87	-3.3
석유가스세	12	13	12	-1	-	-1	-7.7
항공기연료세	83	83	77	-6	-7.2	-6	-7.2
석유석탄세	510	480	480	-30	-5.9	-	-
전원개발촉진세	351	330	330	-21	-6.0	-	-
자동차중량세	646	631	447	-199	-30.8	-184	-29.2
관 세	846	744	756	-90	-10.6	12	1.6
톤 세	10	10	8	-2	-20.0	-2	-20.0
인지수입	985	1,070	1,024	39	4.0	-46	-4.3
합계	46,103	36,861	37,396	8,707	-18.9	535	1.5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算の説明」, 2009. 1.29

- 반면 기타 수입은 외환자금 특별회계 및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잉여금 7.7조엔 등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전년 대비 1.4조엔(15.8%) 증가한 10.6조엔 규모로 추정
-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33.1% 증가한 44.3조엔 규모에 이를 전망
 - 국채발행액이 조세수입을 초과한 경우는 FY1946 이래로 처음이며 FY2010 국가채무 수준은 약 637조엔(GDP 대비 134%)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나. 세출내역

- FY2010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신정부의 정책공약(manifesto) 이행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3.8조엔(4.2%) 증가한 92.3조엔 수준
 - 일반세출 규모는 사회보장관련비 증가, 경제위기대응 및 지역활성화 예비비(1조엔)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엔(3.3%) 증가한 53.5조엔 수준
 - 신정부 정책공약 이행에 따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등으로 사회보장관련비는 전년 대비 2.4조엔(9.8%) 증가한 반면 공공사업관련비는 전년 대비 1.3조엔(18.3%) 감소

<표 III-5> FY2010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십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비교증감액	증감률
	당초(A)	전망(B)	(B-A)	(%)
사회보장관계비	24,834.4	27,268.6	2,434.2	9.8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10.4	5,586.0	275.6	5.2
연금관계비	787.2	714.4	-72.9	-9.3
방위관계비	4,774.1	4,790.3	162	0.3
공공사업관계비	7,070.1	5,773.1	-1,297.0	-18.3
경제협력비	629.5	582.2	-474	-7.5
중소기업대책비	189.0	191.1	21	1.1
에너지대책비	856.2	842.0	-142	-1.7
식료안정공급관계비	865.9	1,159.9	294.0	33.9
기타 경비	5,064.2	5,196.8	132.7	2.6
경제긴급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	1,000.0	1,000.0	-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1,000.0	-	-1,000.0	-
예비비	350.0	350.0	0	0.0
합계	51,731.0	53,454.2	1,723.3	3.3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の変更」, 2009.1.22

□ (정책공약 주요 내용) 일본 신정부는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이념 실현을 위해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양육, 고용, 환경, 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두어 3.1조엔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 (교육지원) 자녀수당 지급 및 고교 무상화: 2.1조엔

- 자녀수당 지급(1.7조엔): 자녀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13,000엔(FY2011에는 26,000엔)씩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등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 고교교육의 무상화(0.4조엔): 공립고등학생은 수업료(연간 약 12만엔)를 면제해 주고, 사립고교생을 둔 가구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저소득 가구의 경우 더 많은 약 18만~24만엔 지급)
- (고용대책) 고용보험제도 기능 강화 및 고용조정 조성금 확충: 0.02조엔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6개월 이상 고용'에서 '31일 이상 고용'으로 완화
 - FY2009 제2차 추경예산상 실업급여관련 3,500억엔 증액
 - 고용조정 조성금 확충: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피고용자의 임금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조정 조성금 지급요건 완화
 - 이에 따른 예산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액(약 7,500억엔)
- (의료·간호) 진료보수 개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 진료보수 개정에 중점: 10년 만에 진료보수의 후자를 추구하고 특히 응급,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에 중점을 두고 지원
 -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응급 입원 의료서비스에 4,000억엔 정도 의료비 증액
 - 간호 노동자의 처우 개선: 근무지 내에 보육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
 -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율 인상 및 간염 치료를 위한 지원 확대
- (환경·과학기술) 친환경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개발, 전기충전설비 설치 등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
 - Green Innovation 등 신성장 전략상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중점 지원
- (농가 지원) 호별소득보상모델 사업 및 수전활용자급력향상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 0.6조엔
 - 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 '생산수량목표'에 따라 생산을 한 농가에 대해 정액부분(10a당 1.5만엔: 과거 수년간의 표준 생산비용과 표준 판매가격 차이의 평균)과 변동부분(당해 생산 판매가격이 표준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수전활용자급력향상사업: 논에서 보리, 콩, 분말 또는 사료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급해 주식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득 수준이 비슷하도록 보장해줌으로써 식량의 자급력을 확보
- (고속도로 무료화) 고속도로 이용 무료화의 단계적 실시: 0.1조엔
 -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한된 노선에서 시범 실시한 후,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도 병행
- (잠정세율) 잠정세율 폐지와 조세부담 경감: 0.2조엔
 - 원유가격의 안정화, 재정 사정,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잠정세율을 폐지하고 현 세율 수준은 유지하도록 함
 - 자동차중량세도 향후 10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하고 잠정세율 부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국고 세수의 1/2을 경감하도록 함
- (연금 기록문제 대응) 연금 수급관련 자료 정리: 0.1조엔
 - 연금 수급자 명부나, 수급액 등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연금 누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전자문서화하고 피보험자의 수급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경기대책) 엔고 및 디플레이션에 따른 더블딥(Double dip) 우려에 따른 탄력적 경기 대응을 위해 2조엔 규모의 예산 확보

<표 III-6> 신정부 주요 정책공약 및 재원확보 방안

(단위: 조엔)

민주당의 주요 정책공약		재원확보 방안	
- 자녀수당	1.7	- 행정쇄신위원회의 사업구분 결과 반영 (공익법인등 기금 반납)	2.0 (1.0)
- 고교무상화	0.4		
- 고용대책	0.02	(예산요구단계에서의 세출삭감)	(1.0)
- 농가지원	0.6	- 예산요구단계 감액	1.3
- 고속도로무료화	0.1		
- 잠정세율	0.2		
- 연금기록문제 대응	0.1		
합계	3.1	합계	3.3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予算説明資料」, 2009.12.25.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대책」 발표 (2009.4.10)
 - 단기적인 경제위기 심화 및 세계경제 재조정 국면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책으로서, 즉 경기침체 완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56.8조엔(재정지출 15.4조엔) 규모의 동 대책 발표
 - 기존 경기부양책에 비해 고용 및 금융안정, 미래성장전략, 세제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분야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둠

- 「경제위기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14.7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2009.4.27)
 - 추경재원은 10.8조엔의 신규 국채발행,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적립금 3.1조엔, 경제대응예비비 0.85조엔으로 구성
 - 추경 내용은 주로 경제위기대응관련 비용이며 이 중 금융대책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방공공단체 지원 등의 금액이 각각 3.0조엔, 2.6조엔, 2.4조엔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54.4%를 차지
 - 「경제위기대책」을 위해 필요한 총재정규모는 15.4조엔이나 고용지원금 0.6조엔(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충당) 및 증여세 감세가 0.1조엔 계획되어 최종 추경예산은 14.7조엔으로 편성

<표 III-7> FY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경제위기대응관련	14,698.7	세외수입	3,106.6
- 고용대책	1,269.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3,100.0
- 금융대책	2,965.9	- 기타	6.6
- 저탄소혁명	1,577.5	국채금	10,819.0
- 건강·육아 등	2,022.1	- 건설국채	7,332.0
- 미래성장동력 확충	2,577.5	- 특례국채	3,487.0
- 지역활성화 등	198.1		
- 안전·안심확보 등	1,708.9		
- 지방공공단체	2,379.0		
국채조정기금특별회계	76.8		
경제대응예비비 감액	△ 850.0		
계	13,925.6		13,925.6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補正予算等の説明」, 2009.4.27.

□ 고용약화 타개를 위한 「긴급고용대책」 발표 (2009.10.23)

-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고용안정 및 향후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내각부 산하 긴급고용대책본부에서 동 대책을 발표
-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빈곤층 및 신규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고용창출의 본격화 등의 3대 분야에 중점
- 기대효과: 빈곤층 고용 최우선 지원, 미래성장분야에의 고용창출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만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 경기침체 및 고용약화에 대응하고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발표 (2009.12.8)

- 고용악화, 디플레이션 압력 및 엔고에 따른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총 24.4조 엔(재정지출 7.2조엔) 규모의 동 대책을 발표
 - 고용촉진, 지구 온난화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환경대책,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기대책,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지원 등에 중점
- 2009년 12월 8일에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기본경비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7.2조엔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발표 (2009.12.15)
- 「긴급경제대책」에 따라 고용안정(0.6조엔), 환경대책(0.8조엔), 경기대책(1.6조엔), 생활안정(0.8조엔), 지방지원(3.5조엔)에 중점
 - 추경 재원은 1차 추경 집행 동결분 2.7조엔,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분 1.2조엔, 국채발행 3.0조엔 등을 활용
 - 한편, FY2009 세수는 당초 예산(46.1조엔)에 비해 9.2조엔 감소한 36.9조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세수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충당

<표 III-8> FY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긴급경제대책」 관련	7,201.3	조세 및 인지수입	-9,242.0
- 고용대책	614.0		
- 환경대책	776.8		
- 경기대책	1,574.2		
- 생활안정	784.9		
- 지방지원	3,451.5		
기타경비	227.4	세외수입	-15.4
기본경비 감액	-7,344.1	국채금	
- 1차추경 집행동결	-2,696.9	- 건설국채	9,342.0
- 지방교부금 ¹⁾	-2,951.5	- 특례국채	100.0
- 경제위기대응예비비	-150.0		
- 예비비	-100.0		
- 기타 기본경비 불용액	-1,445.7		
계	84.6		84.6

주: 1)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액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補正予算(第2号)」, 2009.12.15.

나. 재정건전화

□ 일본 신정부는 2009년 12월 15일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국민생활 보호 및 신성장전략 마련, 예산편성 과정의 개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서 향후 재정건전화 방향을 언급

○ FY2010 및 향후 예산안 수립시 행정쇄신회의의 「사업구분(事業仕分け)」 결과 반영에 따른 세출 삭감, 세수감소에 따른 신규 국채발행 억제, 중장기적 예산의 효율화, 재정건전화의 기본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과정 개혁 추진

- FY2010 예산안 편성시 재정규율을 지키기 위한 목표로 국제발행액을 44조엔 이내로 설정
- 2010년중 중장기적 재정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

다. 고용촉진 · 지원

-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고용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우려되고 있음
 - 일본 실업률은 2009년 3/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5.4%(2009년 7월 사상 최고치인 5.7%)를 기록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사정 악화를 반영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안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먼저 고용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 다음 세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
 - 경제정세 변화에 탄력적 대응: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시의 적절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
 - 빈곤·곤궁자, 신규 졸업자 지원을 최우선: 저소득층, 신규 졸업자, 여성, 중소기업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
 - 고용창출 분야에 중점적 지원: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 유도 위해 미래 성장분야인 간호, 농업, 지역사회(NPO, 사회적 기업 등) 분야에 고용·산업·교육정책 등을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지원

<표 III-9> 일본의 고용동향

(단위: 전년동기 대비, 만명, %)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취업자수(증감)	23	6	-25	-41	-48	-49	-132	-114	-119
비경제활동인구(증감)	12	18	19	32	41	9	58	22	51
실업률	3.9	4.0	4.0	4.0	3.9	4.6	5.2	5.4	5.0
고용률	58.1	57.2	58.4	57.9	57.6	56.7	57.2	56.9	56.6

자료: 총무성, 「勞働力調査(基本集計)」, 2010.1.29.

- 2009년 10월 16일 일본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내각부 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설치
 - 2009년 10월 23일 긴급고용대책본부에서는 ‘긴급 지원 조치’와 ‘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긴급고용대책’을 발표
 - 긴급 지원 조치: 빈곤·곤궁 상태에 있는 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신규 졸업자를 경제·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유지 보조
 - 긴급고용 창조 프로그램: 간호 분야, 그린(농업, 환경·에너지, 관광) 분야, 지역사회(사회적 기업) 분야를 고용 창조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동 대책은 FY2010 예산안의 사회보장관계비에 대부분 반영됨

- FY2010 예산안상 고용대책관련 예산은 ‘긴급고용대책’ 중 ‘긴급 지원 조치’와 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대책관련 예산은 ‘긴급고용대책’상 긴급지원조치에 따라 고용유지대책 0.7조엔(1,182.6%), 고용보험국가부담 0.1조엔(87.9%) 급증 등으로 전년 대비 0.8조엔

(215%) 증가한 1.2조엔 수준

<표 III-10> FY2010 고용대책관련 예산

(단위: 십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증감액	증가율
고용보험국고부담	160.2	301.0	140.8	87.9
고용유지대책	58.1	745.2	687.1	1,182.6
빈곤·곤궁자 지원	1.4	3.4	2.0	142.9
신규 졸업자 지원(신설)	-	0.4	0.4	-
여성취업 지원	2.1	2.2	0.1	4.8
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	143.9	116.6	- 27.3	- 19.0
합 계	371.1	1,168.8	797.7	215.0

자료: 재무성, 「平成22年度社會保障關係予算」, 2009.12.25.

- 고용보험국고부담: 3,010억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129억엔): ‘6개월 이상 고용 예상’에서 ‘31일 이상 고용예상’으로 완화
 - FY2009 2차 추경예산상 실업급여관련 예산을 3,500억엔 증액
- 고용유지대책: 7,452억엔
 - 고용조정조성금: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사
 - 고용조정조성금의 공급요건을 완화: 기존에는 생산량, 매출고 등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완화 이후 2년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적자기업의 경우도 포함
 - 연간 고용조정조성금 지급한도일(200일) 폐지
- 빈곤·곤궁자 지원: 34억엔

-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생활지원 제도의 정비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 종합 센터」의 설치 확대(19개소 → 32개소)
 - 신규 졸업자 지원 신설: 4억엔
 - 미취업 졸업자의 인턴십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여성 취업 지원: 22억엔
 - 유자녀 여성 취업 지원 사업소 증설(148개소→163개소)
 - 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 삭감:
 - 행정쇄신위원회의 사업구분 결과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관련 지출(고용·능력개발 기구 운영비 교부금 등, 고령·장애자 고용지원 기구 운영비 교부금 등)은 삭감
- 2009년 12월 30일 일본정부는 ‘신성장전략’ 발표시 환경, 에너지, IT기술, 관광, 농림수산업 등을 신성장 분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

IV. 프랑스

□ FY2010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2009년 9월 30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2010년 1월 20일에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350억유로 규모의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한 수정예산(PLFR 2010) 발표

□ 출처

- 2010년 예산안(PLF 2010: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0)
- 2010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 (프랑스 정부 발표)
 - Les grandes lignes, Les chiffres clés 등
- 2010년 본예산 (LFI 2010: Loi n° 2009-1673 de finances pour 2010)
- 2010년 수정예산 (PLFR 2010: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0)
- The EEAG Report on the European Economy 2009, European Economic Advisory Group at CESifo, 8th edition.
- Labour Market and Wage Development in 2008, EC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Economy Volume 2009, Issue No. 08.
- 기타 정책자료: <http://www.vie-publique.fr>, <http://fiso.fr>,
<http://www.relance.gouv.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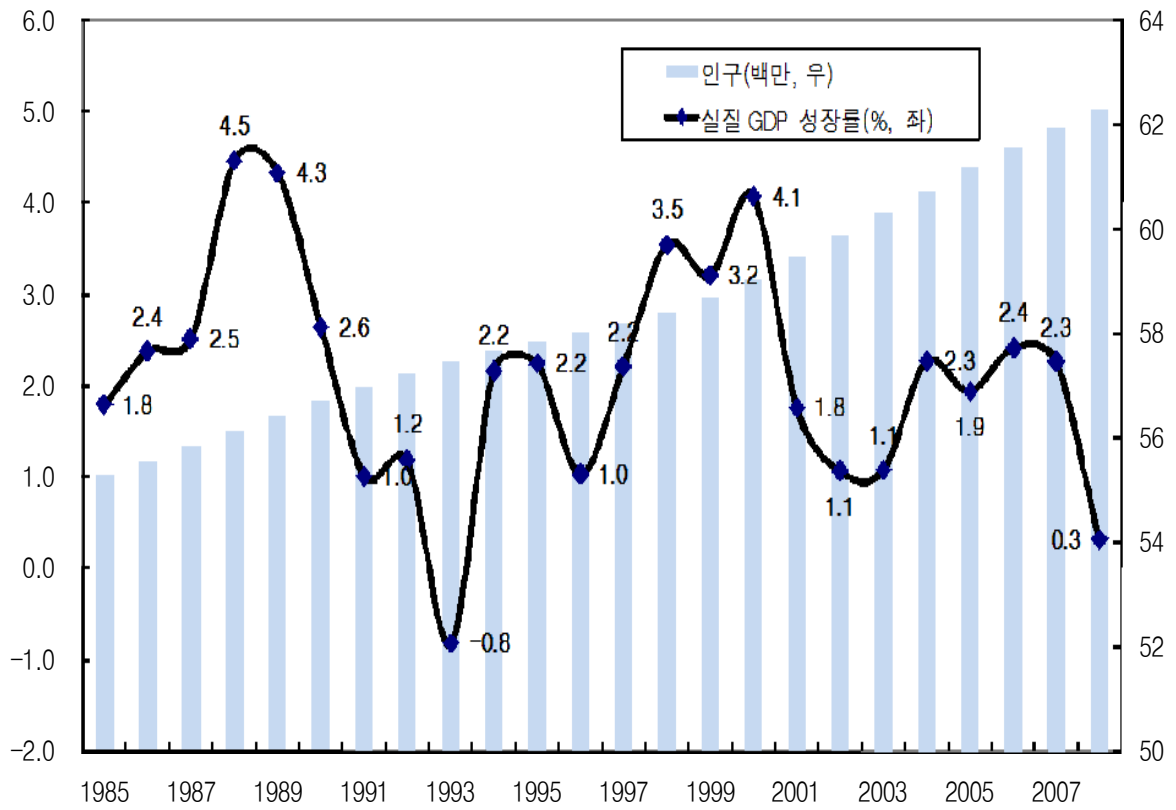
□ 환율 : 1유로 = 약 1,774.4원 (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1,217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55.4%(우리나라 107.0%)

□ 인구 : 6,412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고용부문의 부진을 제외하고 대외환경 및 국내수요의 대부분이 성장을 상향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수정예산의 전망은 기존보다 더욱 긍정적)
-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8.5%(1,173억유로)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대규모 국채발행계획을 반영하여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비, 1) 작년에 이어 주요 경제위기대응정책을 연장 및 시행하며 2) 미래성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3)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기업 세제혜택 확대(사업소세 개혁, 연구개발비관련 세금공제, 부유세 감세)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친환경자동차 지원 등을 통한 녹색성장산업 및 미래 성장을 위한 대학교육 및 연구투자개발부문 투자 확대

◇ 예산안 내용

- 예산안 (PLF 2010) : 2010년은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나 사업소세 개혁으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GDP 대비 8.5%)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

- 수정예산 (PLFR 2010):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12월에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국채발행을 포함하여 수정예산 발표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0.75% → 1.4%)을 반영하고 대규모 국채발행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 (예산안보다 319억유로 증가)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2010년 위기 대응정책(Plan de relance) 관련 예산규모는 70억유로로 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공제, 자동차산업지원정책, 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확대 정책으로 사용될 예정
- 재정건전화: 2008년 이후로 정부지출을 강력하게 통제, 2010년에도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한 정부지출부문(일반회계)은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고용촉진·지원: 위기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련기금 조성, 청년층 등 고용증대를 위한 기업 세제지원 및 관련제도 정비 또는 유연화. 장기적으로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평생직업) 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및 지속 추진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 프랑스 경제는 2008-2009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2009년 2분기부터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대, 수출을 촉진하면 투자증수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수정예산⁶⁾ (PLFR 2010)에 따르면 프랑스가 위기로 인한 충격이 덜하고 회복이 빠르며, 특히 본예산 발표 이후 수요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 이로 인해 경제전망의 상당 부분을 상향조정

- 그러나 고용사정의 부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재정적자 규모 확대 등은 회복세를 저지하고 재정 측면에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6) 2010년 1월 11일까지 유효한 정보를 토대로 전망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십억유로, %)

변수	2008	2009	2010 본예산	2010 수정예산
GDP	1,950	1,932	1,970	1,973.6
실질성장률	0.4	-2.25	0.75	1.4
명목성장률	2.9	-0.9	2.0	2.5
가처분소득증가율	0.6	1.5	1.0	1.7
가계소비증가율	1.0	0.6	0.8	1.4
기업투자증가율	2.6	-7.9	0.6	0.6
수출	-0.2	-11.4	2.6	3.7
수입	0.8	-8.8	3.4	3.6
소비자 물가	2.8	0.4	1.2	1.2
무역수지	-55.5	-47.6	-47.8	-45.0
재정수지(GDP 대비)	-3.4	-8.2	-8.5	-8.2

자료: Les chiffres clés, PLFR 2010.

- (경제성장률) 2009년 실질GDP가 -2.25%에서 2010년 0.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예산안)하였으나 2010년 1월 수정예산(PLFR)에서 OECD⁷⁾와 같은 1.4%로 상향 발표
- 기존 전망이 실업 등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반영, 매우 신중한 접근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고용이 다소 상향조정되고 수요부문도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장률 역시 상향조정
-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10년에도 1.2%로 높지 않을 것임(OECD 전망은 이보다 낮은 1% 내외)
- (기업투자) 2009년 전년 대비 -7.9% 감소한 데 반해 2010년에는 전년 대비 0.6% 증가할 전망. 단, 금융환경 악화, 디레버리지,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7) OECD, Economic Outlook No. 86 (November 2009) pp. 159~163

- (가계소비) 정부의 직접지원(전체 직접지원 450억유로에 대해 가계부문이 지원이 140억유로), 낮은 인플레이션 및 대외조건 개선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2009년 0.6%에서 2010년 0.8%)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은 2010년 전망치를 전년 대비 1.4%로 상향조정
- (고용 및 실업) 2010년에도 고용시장 불황이 예상되나,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 말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실업은 2007년 5월에서 2009년 11월 사이에 21% 증가(미국은 동기간 124% 증가), OECD는 2011년 초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10% 내외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은 예산안보다 일자리 감소분을 축소 전망하는 등 더욱 낙관적인 수치 제시
- (기업금융환경)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타격이 적었던 프랑스는 기업금융환경 측면에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으로 평가

나. 재정전망

<표 IV-2> 프랑스 2001-2010년 재정총량 (예산안 기준)

(단위: GDP 대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정 예산포 합)	2010 (LFI 기준)
세출	51.6	52.6	53.3	53.2	53.4	52.7	52.3	52.7	55.6	55.9
세입	50.0	49.5	49.2	49.6	50.4	50.4	49.6	49.3	47.4	47.4
재정적자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1.5	-3.1	-4.1	-3.6	-2.9	-2.3	-2.7	-3.4	-8.2	-8.5
국가부채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56.9	58.8	62.9	64.9	66.4	63.7	63.8	67.4	77.1	84.0

자료: INSEE(경제 및 통계연구기관) 및 예산청 자료 참조해서 작성. 2008년까지 자료는 INSEE 자료, 2009년 이후 자료는 예산청 자료임

-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8.5%(1,173억유로)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과 대규모 국채발행계획을 반영하여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전망
 - 2009년 재정적자는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GDP 대비 8.2%로 전망하였으나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7.9%로 개선
 - 2010년 수정예산(PLFR 2010)에 의해 1.4%로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1,492억유로)로 유지될 전망
 - 2010년 예산안(9월 발표)에 의하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로 예상, 이는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입감소부문을 제외하면 GDP 대비 8.2%로 2009년과 동일

- 2010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84.0%(2009년 대비 7% 증가)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GDP 대비 8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77.1%(2008년 대비 9.7% 증가)로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GDP 증가율 감소에 기인한 것임
 - 수정예산(PLFR 2010)에 의하면 1.4%로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국가부채도 GDP 대비 83.2%로 개선될 전망

2.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PLF 2010)은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비 1) 작년에 이어 주요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집행 및 연장시행 2) 미래성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3)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주요 세입 및 세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감소 정책은 제4장 ‘나. 재정건전화’에서 자세하게 설명

가. 세입내역

- 기업 세제혜택 확대(사업소세 개혁, 연구개발비관련 세금공제 등)와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주요 내용임
 - 조세수입은 사업소세 개혁 등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입이 증가, 전년 대비 18.9% (25,230억유로) 증가
 - 사업소세 개혁으로 2010년 재정적자의 약 117억유로에 해당하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기업에게는 74억유로에 해당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
 -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순세입(환급금 제외)은 15억유로로 예상
 -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22.2%(약 7억유로) 감소한 149억유로인데 이는 2009년에 차관회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

나. 세출내역

-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지출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 세출은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도 실시된 경제위기 대응정책 연장선하에서 고용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71억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정책 실시 예정 (주요내용은 제4장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에 정리)

-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유사하나 경제위기의 영향력이 큰 부문은 지출이 전년 대비 증가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부문: 전년 대비 약 10%(11억유로) 증가
 - 주택 및 건설 부문: 전년 대비 약 5%(4억유로) 증가
 - 건강 복지 부문: 전년 대비 약 6%(1억유로) 증가
- 법무부 개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4%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무원 인력을 400명 더 충원할 예정
 -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충원은 상당히 이례적임

<표 IV-3> 2009-2011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Action extérieure de l'Etat	외교	2.51	2.63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일반공공행정	2.59	2.60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농업·임업·수산업	3.47	3.45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공공보조(저소득층 지원·외국인 이민자 지원 등)	3.15	3.52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퇴역군인 지원	3.47	3.43
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	0.55	0.57
Culture	문화	2.78	2.92
Défense	국방	37.33	37.15

주: 1) 2009년 자료는 LFI 2009, 2009년 경제위기대응정책 지출규모는 PLFR 2009 참고, 2010년 자료는 PLF 2010 기준으로 작성

2) 세출내역은 CP (CRÉDITS de Payment)을 기준으로 작성

<표 IV-3> 의 계속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국가정책방향(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0.53	0.55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9.92	10.15
Economie	산업 및 기업 지원	1.94	1.94
Enseignement scolaire	교육	59.91	60.85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11.31	11.58
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이민 및 통합정책	0.51	0.56
Justice	법무부	6.63	6.86
Médias	언론	1.01	1.15
Outre-mer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	1.87	1.99
Politique des territoires	균형발전정책	3.72	0.38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R&D 및 고등교육	24.10	24.81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은퇴자 지원	5.20	5.73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지방재정지원	2.49	2.51
Santé	건강 복지	1.15	1.20
Sécurité	치안	16.18	16.40
Sécurité civile	시민안정 (자연재해 및 화재등)	0.42	0.43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11.13	12.37

<표 IV-3> 의 계속

미션		2009 본(수정)예산	2010 예산안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0.79	0.85
Travail et emploi	노동 및 고용	12.16	11.41
Ville et logement	건설 및 주택	7.66	7.81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정부재정관리 (부채 관리·국채발행 등)	44.64	44.19
Provisions	예비비	0.21	0.12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경제위기대응정책	12.56	4.10
Pouvoirs publics	의회·헌법위원회 등	1.02	1.02
합계		292.90	285.23

주: 1. 2009년 자료는 LFI 2009, 2009년 경제위기대응정책 지출규모는 PLFR 2009 참고, 2010년 자료는 PLF 2010 기준으로 작성
 2. 세출내역은 CP (CRÉDITS de Payment)을 기준으로 작성

다. 의회 주요 수정 내용

- 국회심의 및 의결로 2010년 본예산(LFI 2010)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cellier’ 혜택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하여 임대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2010년까지 2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2011년부터는 세금감면 혜택이 15%로 줄어들 예정)
 - 부유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대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액으로 세제혜택 확대
 -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세액부족분에 대해 지역경제기여세(CET: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약 40억유로의 세수 확대 (본예산에

서는 연매출이 50만유로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었으나 상원의 수정으로 연매출이 152,500유로 이상인 기업에게 부과. 단, 연매출이 152,500 ~ 500,000 유로인 기업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함)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감소 (2010년 이전 : 25,000유로+과세소득의 10% → 2010년 이후: 20,000유로+과세소득의 8%)

※ 사업소세 개정내용

- 사업소세는 지역기여세(CLA: Cotisation Locale d'Activité) 부문으로 변경되어 부가세(CC: Cotisation Complémentaire)와 함께 지역경제기여세(CE)로 통합 (CET=CLA+CC)
- 지역기여세는 과세대상을 건물 및 토지에 한정, 동산을 포함하는 현재 과세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약 15%만큼 감소

3. 예산안 내용 (PLF 2010 및 PLFR 2010)

- (예산안: PLF 2010 기준) 2010년은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재정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나 사업소세 개혁으로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
 - (세입) 경기가 호전되면서 총세입(Total recettes nettes du budget général)은 2009년 대비 15.5% 증가
 -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O₂ 1톤당 17유로(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릴 계획)의 세율로 탄소세 부과 예정
 - 사업소세 개혁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은 117억유로로 세수부족분은 탄소세 등으로 보충할 예정
 - (세출)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감소하면서 세출은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고용시장 불황으로 인한 사회보장관련 비용 증가(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300억유로)
 - (재정적자) 2010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8.5%(약 1,173억유로), 사업소세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력을 제외하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임

- (수정예산: PLFR 2010 기준) 2009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350억유로 규모의 미래투자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 및 관련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수정예산 발표
 -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본예산보다 총세입이 31억유로 증가
 -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을 반영, 탄소세를 포함한 세제관련 차별적인 조치(특별계층에 대한 감세 및 환급정책)를 시정 (예산안보다 세입 22억유로 감소 예측)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을 반영,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예산안보다 36억유로 증가 예측)
 - 탈세방지정책으로 인한 추가세입으로 7억유로 예상
 - 비조세수입이 1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융업 종사자의 상여금 (보너스)에 세금 부과 예정

- 미래투자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나 이러한 국채발행이 2010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GDP의 0.1%(22억~25억유로)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0.75% → 1.4%)을 반영하고 대규모 국채발행 관련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자는 GDP 대비 8.2%(본예산보다 319억유로 증가)로 전망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 2010년 위기 대응정책(Plan de relance) 관련 예산규모는 70억유로로 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공제,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저소득층 지원 및 고용확대 정책으로 사용될 예정
 - 2009년에 시행된 총 390억유로 규모의 경제위기 대응정책과 비교하면 2010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관련 예산규모는 현저히 감소한 것임(당초에는 260억 규모로 발표)
 - (재정지출) 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총 41억유로 규모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집행될 예정
 -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투자기금(FISG: le Fonds d'investissement social)에 14억유로 지원 예정
 - FISG는 경제위기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금(25억~30억유로 규모)으로 2009-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확대 및 취업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정부투자 외에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짐
 - 이 중 약 2억유로 정도가 청년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입
 - 중앙정부는 GDP의 약 0.1%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의 고용지원 정책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이에 4.1억유로 예산 배정
 - 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충수당(RSTA: Le revenu supplémentaire temporaire d'activité)으로 2억 8천만 유로 배정
 - RSTA: le territoire de Guadeloupe, de Martinique, de Guyane, de la Réunion, de Saint Martin, de Saint-Barthélemy et de Saint-Pierre et Miquelon 등의 지역(프랑스령 국가) 에서 일하는 저소득 임금노동자(폴타임 기준, 월급이 1872.82 유로(1.4 Smic) 이하)에게 제공되는 수당
 - 이 외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 7억유로 지원 예정

-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4억유로 지원하지만 점차적으로 폐지(1분기: 700유로, 2분기: 500유로)
- 저소득층 대상 주택자금 용자시 제로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2012년 12월까지 연장 시행
- (세제혜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5억유로 규모의 기술개발비 세액공제(CIR: Le Crédit d'impôt Recherche) 예정
 - CIR은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인건비, 연구개발 하청작업, 특허출원 경비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연구 관련 지출에 대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나. 재정건전화

- 프랑스는 2008년 이후로 정부지출(일반회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함
 -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한 정부지출부문(일반회계)은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2010년 세출은 경제위기 대응정책은 제외하고 1.2~1.7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지출 역시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 정부부문 고용제한 및 인건비 통제를 통해 비용절감 노력
 - 이러한 지출통제를 통해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지방정부지출에도 이러한 지출 원칙 적용)
- 2008년 7월 개헌에 의거, 헌법 34조에 따르면 프로그램법에 의해 다년도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는 균형재정수지를 목표로 해야 함
 - 그러나 EC의 11월 Commission recommendation에 의하면 이러한 조항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다. 고용촉진 · 지원

-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는 약 114억유로의 고용관련 예산에 더하여 경제위기 대응정책 (2009년-2010년)에서 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 관련 부분은 14억유로 정도임
 - 프랑스의 실업률은 OECD 국가 평균치(8.8%)보다 높은 10.0%로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함(2009년 11월, OECD 통계기준)
 - 2010년 고용 관련 예산정책 방향은 1) 실업 억제 및 출구전략 대비 2) 관련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혁신 3) 정책 효율성 증대 및 정부정책개혁보고서 (RGPP: La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시행 등임
 - RGPP: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으로, 이 중 고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연대소득에 대한 기존의 4개 사회통합계획을 일원화한 것이 있음. 유연성을 높이되 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

- 고용 관련 예산 항목(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 고용증대를 위한 지원: 실업 감소와 고용 증대 및 고용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노력, 특히 취약계층(청년, 노년층 및 장애인) 취업 지원
 - 경제적 변화 및 고용 개발 : 보조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금 면제, 직업훈련 및 교육
 - 고용의 질 제고 및 의사소통 증진: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사회적 소통 증진 등
 - 고용정책에 관한 기안, 실행 및 평가

<표 IV-4> 프랑스 FY2009-2010 고용관련 예산

(단위: 십억유로, %)

세부 프로그램	2009 본예산 (LFI)	2010 예산안 (PLF)	증가율
고용증대노력	5.98	5.89	-1.5
경제적 변화 및 고용 개발에 따른 비용지원	5.25	4.64	-11.6
고용의 질 제고 및 소통 증진	0.05	0.08	60.0
고용정책 기안, 실행 및 평가	0.8	0.8	0

주: 증가율은 저자가 직접 계산

□ 고용 유지 및 지원 (소극적 정책)

- 위기대응 한시적 정책: 1) 신규 실업자에 대한 퇴직금을 2010년 6월까지 500유로 보조 2) 2억 8천만유로 규모의 임금보충수단(RSTA) 기한 연장
- 위기대응 장기적 정책: 1)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2/3 감면 및 세제 혜택 2)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서 4개월 이상으로 확대

□ 고용창출(적극적 정책)의 경우, 2010년은 2009년 확립된 계획을 지속 추진, 구체화하는 단계임

- 위기대응 한시적 정책: 1) 10명 미만 기업(TPE)의 신규 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부 담금 감면(2010년 6월까지) 2) 사회적 투자기금(FISO)에 2009년 13억, 2010년 14억 유로(추정) 투자 예정
- 위기 이후 장기적 정책
 - 1) 단시간 근로자(Chômage Partiel⁸⁾)의 연간 근로시간 최대치 연장(연간 600시간에서 1,000시간) 및 보조금 인상(이전 임금의 50%에서 60%)

8) 일종의 임금피크제로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거나 반드시 정년과 연관되는 것은 아님. 이 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기 침체, 천재지변, 기타 사업장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때 등 법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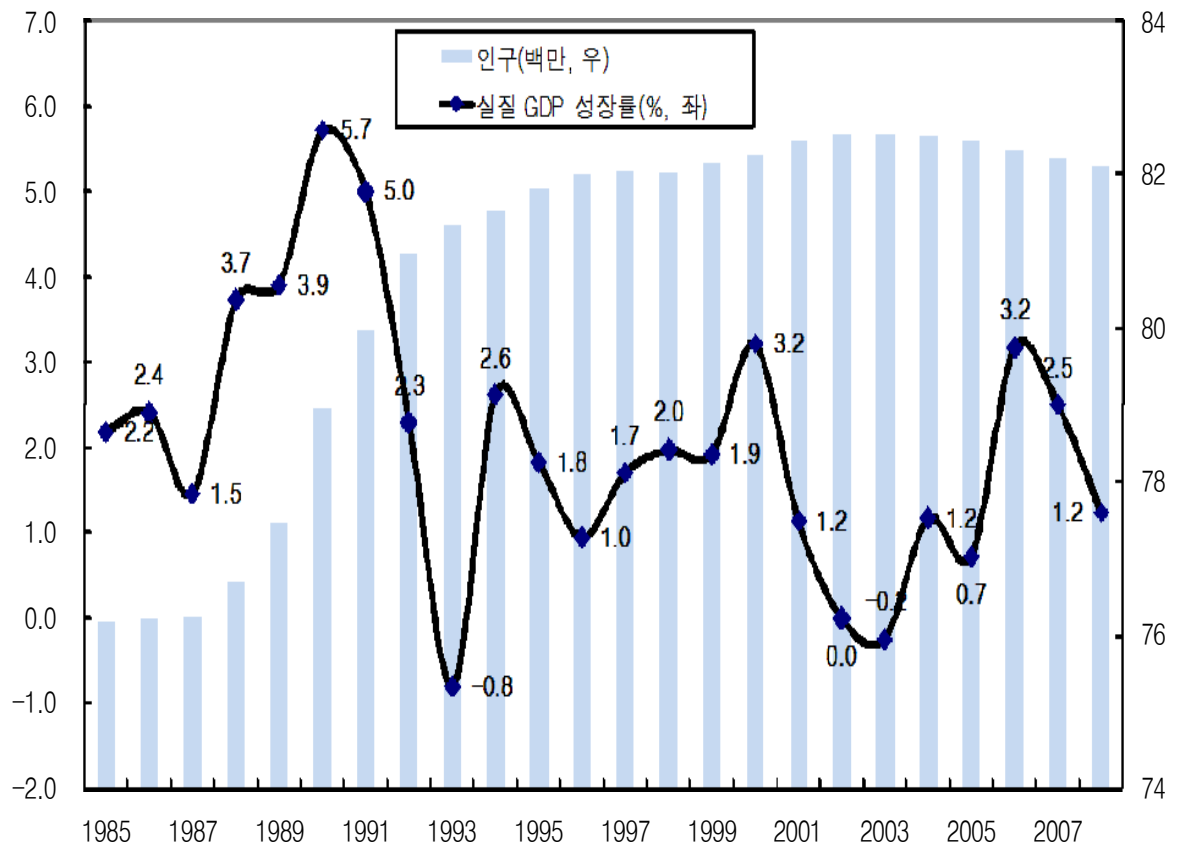
- 2) 능동적 연대수입(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의 전국적 확대 실시 및 2년 이상 근무한 25세 미만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 RSA: 기존의 RMI(Revenu Minimum d'insertion)에 따르면 취업 직후 보조금이 만료되는데,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저임금에 대한 소득세율(49.6%)이 EU 평균(41%)에 비해 높음)로 인해 취업 후 가계소득이 오히려 감소, 구직을 포기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등 '실업 함정(inactivity trap)' 문제가 생김. 이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점차 경감시킨 뒤 만료(smoothing)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
- 3) 국가고용센터(ANPE)와 실업보험담당기구(ASSEDIC)의 합병을 더욱 가속화하여 one-stop 서비스로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실업복지 의존도 완화
- 4) PES(Public Employment Services) 조건 강화(2008): 수혜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제안에 대해 최대 2회까지만 거절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2달간의 실업급여를 포함한 복지를 포기하거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함
- 5) France Emploi 기구 신설하여 1) 실업자 등록 및 각종 복지혜택 신청 2) 구직자의 컨택 포인트 3) 개인별로 특화된 고용플랜 제공 등을 담당토록 함
- 6) 직업안정공동기금(Fonds paritaire de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9억유로 규모, 고용기업이 일부 부담하여 구직자 및 비숙련 노동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커리어 개발 및 고용안정 노력
- 7)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직 또는 이직하더라도 재직 당시 평생교육권한(DIF)을 통해 기득한 교육시간을 계속 소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개인이 고용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2004년 제정)로서 유급(근무시간을 전환하여 교육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 근무시간 외 교육시간을 사용하면 반액 급여 추가 지급)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 기업 및 개인의 경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시간, 즉 권리의 정도는 다름

- 8) 26세 이상의 구직자가 Professionalisation Contract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대상을 능동적 연대수입(RSA) 또는 기타 보조금 수혜자 및 장애인에게 확대
- Professionalisation Contract: 일종의 도제계약으로 취업시장에서 경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 지도교사를 배정하면 관련 교육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 청년층 취업을 도움
- 9) 미래투자계획(Investissements d'avenir)에서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 및 기숙사 설립에 5억유로 지원 예정

V. 독일

- FY2010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2010년도 독일 예산안 통과 일자
 - 2009년 7월 2010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09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 독일내각 통과
 - 2010년 1월 셋째 주 하원 제1독회
 - 2010년 2월 12일 상원 심의 예정
 - 예산안 의회 통과 예정일자 : 하원 - 3월 셋째 주, 상원 - 3월 26일
 - 2010년도 예산 4월 중 법적효력 발생 예정
- 출처
 - Bundeshaushalt 2009, Finanzplan des Bundes 2009 bis 2013 (2009.7)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Pressemitteilungen (2009.12.16)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de/)
 - Bundes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09.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
 - OECD, Economic Outlook (2009.11)
 - Kiel Institute (www.ifw-kiel.de)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ww.cesifo-group.de/)
- 환율 : 1유로 = 약 1,774.4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9,097억달러(우리나라 2.2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88.3%(우리나라 107.0%)
- 인구 : 8,212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0년 독일경제는 플러스성장 기대, 민간소비, 생산량 및 실업률 등의 기타 경제지표는 여전히 위축
- (재정전망) 2010년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총 3,254억유로, 이중 신규차입은 858억유로, 부채비율은 GDP 대비 78%로 전망

◇ 예산기조

- 차입규모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핵심
- 금융시장 안정화법, 성장촉진법, 사회보장안정법, 시민부담경감법 등을 통해 정부는 경기부양 노력 지속

◇ 예산안 내용

- 2010년도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입금이 대폭 증가해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
- 총지출은 3,254억유로로 연금 및 건강보험, 노동시장, 국방, 교육 및 연구부문에 집중 투자

◇ 주요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제1, 2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시민부담 완화, 고용시장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 (재정건전화) 독일 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 개정, 2011년부터 단계적인 차입금 감소 노력 시행 예정
 - 또한 재정안정화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고용촉진 및 지원) 2010년도 독일연방노동사회부의 총예산은 1,470억유로이며 이 중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총 233억유로 규모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도 독일경제는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는 반면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 및 생산량은 여전히 위축
 - (경제성장률) 2010년도 독일은 1.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2009년 5월 전망에서 약 0.4%p 상승)
 - (수출) 2009년도 수출둔화 현상은 세계적인 경제회복에 힘입어 올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 (민간소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며 설비투자 및 건물투자는 감소 예상
 - 이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는 감세, 건강보험료 인하, 자녀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촉진됨
 - (생산량) 2010년에도 유희생산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실업률) 2009년 12월 기준 독일의 실업자 수는 330만명, 실업률은 7.8%로 집계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 경제예측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2011년부터 연간 2%씩 증가할 것이고 실업률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OECD		IMF		독일중앙은행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GDP 성장률	-5.0	1.2	-4.9	1.4	-5.3	0.3	-4.9	1.6
CPI ¹⁾	0.3	0.8	0.2	1.0	0.1	0.2	0.3	0.9
실업률	7.7	9.2	7.6	9.2	8.0	10.7	8.2	9.1
수출 ²⁾	-15.4	2.6	-14.4	7.2	-16.9	0.9	-14.8	4.5
수입 ²⁾	-9.5	2.0	-8.2	5.1	-11.4	-1.9	-8.2	3.9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09년 10월

OECD, OECD Economic Outlook 86, 2009년 11월

IMF, Economic Outlook, 2009년 10월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09년 12월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독일정부는 2009년 7월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발표

○ (재정수입) 2010년 재정수입은 3,254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한 형태

- 조세수입은 2,119억유로로 이는 2006년도의 조세수입과 유사한 수준

○ (재정지출) 2010년 재정지출은 GDP 대비 13.3%로 예상되며 이는 2008년 11.3%와 2009년 12.9%를 상회, 전년 대비 약 310억유로 증가

○ (재정적자) 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에서 이자를 제외한 지출액은 2010년 485억유로로 2009년의 76억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준

○ (신규차입) 2010년도 신규차입은 858억유로로 이는 총지출 대비 26.4%, 전년도

16.2%, 2008년 4%에서 대폭 상승

-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차입금 발생규모는 435억유로
-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차입금은 총 233억유로 규모이며 이 중 160억유로는 연방노동청에 할당
- 독일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102억유로 규모 차입금 발생, 이 중 39억유로는 정부 보조금
- 제1, 2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차입금 발생규모는 총 40억유로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 (2009~2013) - 수정예산 반영 이전

(단위: 십억유로, %)

	2008	2009 (추정치)	2010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11	2012	2013
I. 재정지출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전년 대비 증가율	4.4	7.4	8.0	-2.0	-0.9	-1.5
II. 재정수입	282.3	303.3	327.7	321.1	318.3	313.5
조세수입	239.2	224.1	213.8	221.9	232.4	240.6
세외수입	31.5	30.2	27.8	27.5	27.2	27.0
자본수입	6.7	2.0	2.3	3.3	3.6	3.6
신규차입	11.5	49.1	86.1	71.7	58.7	45.9
III. 투자지출	24.3	32.8	48.6	43.3	39.1	35.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9 bis 2013, 2009년 7월

<표 V-3> 연방정부 2010년도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08	2009 (2009년 2차 추경 반영)	2009 (2009년 11월 기준)	2010 (예산안)
I. 재정지출	282.3	303.3	294.5	325.4
전년 대비 증가율	4.4	7.4	4.3	7.3
II. 재정수입	282.3	303.3	294.5	325.4
조세수입	239.2	224.1	227	211.9
세외수입	31.5	30.2	30	27.7
자본수입	6.7	2.0	2.0	2.3
신규차입	11.5	49.1	37.5	85.8
III. 투자지출	24.3	32.8	28.5	28.7

자료 : 독일 재무부, 2009년 12월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각 기관별로 발표한 현재 독일의 재정수지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여전히 적자 재정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정부는 현재 각종 정책을 제시하여 재정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해 노력

○ IMF, OECD 및 독일연방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재정적자는 2009년보다 증가한 GDP 대비 4.6%~5.3%로 예측

○ IMF와 OECD는 2011년부터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V-4>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IFO (2009년 12월) ¹⁾	0.0	-3.0	-5.1	-5.5
KIEL (2009년 12월) ²⁾	0.0	-3.0	-5.2	-5.8
IMF (2009년 10월)	-0.1	-4.2	-4.6	-3.6
OECD (2009년 11월)	0.0	-3.2	-5.3	-4.6

주: 1)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09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3%였으며 2010년에는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의 2009년 가을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독일정부의 부채규모가 80%를 상회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0%가 넘을 것으로 예측

<표 V-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 (IMF/EU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MF	63.44	67.11	78.69	84.52	87.84	89.66	90.08
EU집행위	65.0	65.9	73.1	76.7	79.7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년 10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09년 10월

2.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차입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소할 계획
 - 2010년도 861억유로의 차입 규모를 2013년까지 459억유로로 축소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입규모를 감소시켜 2016년까지 GDP의 0.35% 또는 100억유로 규모로 줄임

-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전반적인 독일 경제는 2009년도에 이어 균형 상태로의 회복은 힘드나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 지속
 - 연방정부는 자동안정장치를 적용해 2009년부터 각종 국민 세금을 완화했으며 고용 시장 지원 등에 지출을 증가하는 등 경제완충 효과를 기대
 - 금융시장 폭락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안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법(Finanzmarkt stabilisierungsgesetz)을 2008년 제정하여 시행
 - 2009년 12월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안이 독일 하원을 통과, 이는 가계 및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
 -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회보장안정법(Sozialversicherungs - Stabilisierungsgesetzes)안은 실업자 보조 및 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들의 보호수단 역할
 - 제 1, 2차 경기부양책 및 시민부담경감법(Bürgerentlastungsgesetz)으로 경기촉진을 기대
 - 올해도 연장 시행되는 위 정책들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인하, 연금 증액 등의 형태로 가계부문 지원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10년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차입금은 대폭 증가해 총 재정수입은 3,254억유로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
 - 2010년 조세수입은 총 2,119억유로로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의 시행 결과임
 - 소득세 인하, 에너지세법 및 탈세방지법의 개정, 법인세 및 상속세 개정, 시민부담 경감법(Bürgerentlastungsgesetz) 및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 등의 시행
 - 2010년도 개인 및 기업의 재정부담은 총 26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나. 세출내역

- (교육 및 연구) 2010년도 교육 및 연구에 약 108억유로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
 - 정부는 교육분야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저소득층 및 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자금 지원
 - 아동의 학교 입학에 맞추어 각종 언어시험을 통해 독일어 구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 추진
 -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지원
 - 정부는 향후 4년간 독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총 120억유로를 추가 지급 계획

- (경제협력 및 개발) 2010년 경제협력 및 개발 항목에 총 58억유로가 할당
 - 연방정부는 행정부처인 경제협력 및 개발부(BMZ)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 및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왔음

-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상환펀드를 통해 1억유로를 지원
 - BMZ는 2010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4,400만유로를 배정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식량 조달 목적으로 총 7억유로를 소요
 - 독일은 배출권 거래세의 수입을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정책에 사용
- (내무부) 2010년 독일 내무부(BMI) 예산은 56억유로인데 이 중 37억 7,000만유로가 국가안보에 사용될 예정
- 연방경찰청에 24억유로를 배정하고 그 외 범죄수사단, 재난구호, 이민자 및 난민 등의 항목에 대한 지원 추가
- (국방 및 기타) 2010년 투자 예산은 311억유로이며 이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
- 2009~2010년 투자 및 상환펀드의 수입 중 2억 6,000만유로 이상은 국방부(BMVg)의 군수물품 조달, 2억 5,000만유로는 군인 막사 설치 지원, IT 기술개발에 5억유로 지급
- (환경 및 기후변화) 환경정책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자연보호, 에너지 절감, 혁신 등이 주요 과제
- 독일연방환경부(BMU)는 올해 15억 8,000만유로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이는 지난해 대비 2억유로 이상이 증가한 금액
 - 폐기물처리 시설, 환경혁신 프로그램, 자동차 매연필터 설치 대상 확대 등에 자금 지원
- (경제 및 기술지원) 2013년까지 연간 5억유로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1차 예산안보다 1억유로 증가한 형태
- 기존 연구 활동에 유리하도록 재정지원 확대, 독일 국립 항공우주연구센터(DLR)의 연구에 1,750만유로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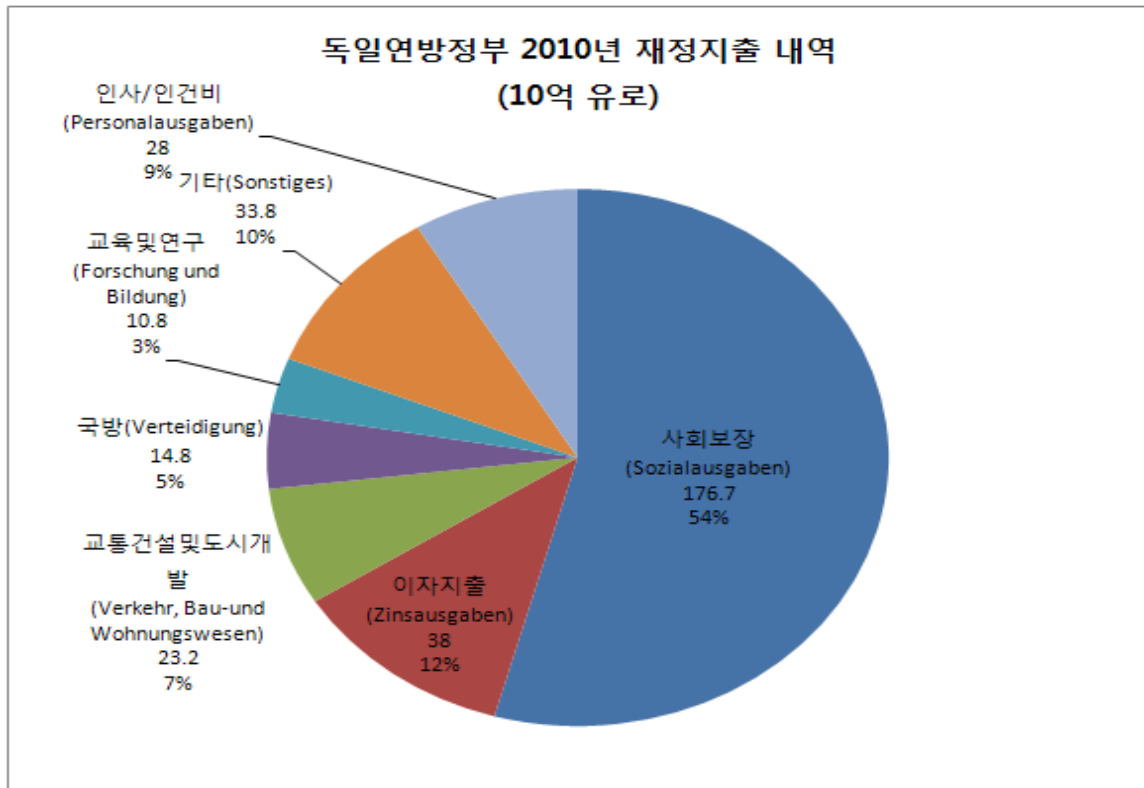
-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비용으로 항공우주 개발에 1,600만유로, 에너지 연구에 900만유로, 정보통신기술에 1,000만유로, 동독 거주자 기술개발 투자에 1,600만유로 등을 지급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만유로를 투입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독일정부는 광대역(broadband) 보급을 위해 400만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
- (교통 및 도시개발) 독일연방 교통·도로·도시개발부 예산은 총 264억유로 규모
- 이 중 도로, 철도, 하수시설 및 교통시설 투자에 108억유로 소요
 - 교통개발, 유럽 기후모니터링 위성 네트워크(GMES) 및 위성합법시스템(Galileo) 등에 126억유로 투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건물 재건축 프로그램(CO₂ - Gebäudesanierungsprogramm), 도시개발,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28억유로 추가 지원
- (연금 및 건강보험) 연금은 2010년 독일연방 총예산의 약 24.6%로 808억유로에 해당
- 건강보험을 위해 정부는 수입 및 보조금으로 총 157억유로를 추가 지급
 - 1차 예산안에 118억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명시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에는 39억유로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 2010년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약 4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총지출은 약 233억유로
- 이 중 160억유로는 연방노동청에 할당하여 경기부양책에서 제시한 단기근로자 고용 지원금 또는 노동청 재정적자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
- (가족지원) 독일정부는 2010년도 가족지원 정책에 총 66억유로 소요
- 성장촉진법은 2010년부터 자녀수당 증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이로 인한 추

가 지출은 5,000만유로

- 자녀수당 20유로씩 증가
- 자녀공제액 연 6,024유로에서 연 7,008유로로 상향 조정

□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독일정부는 식품, 농업 등의 항목에 각종 지원금 제공

- 농기업 및 농업시장에 총 4억 2,500만유로 지급
- 우유생산을 위한 초지농업 보조금으로 3억유로 지급
- 2010~2012년 바이오연료세 및 식물성연료세 인하 등



자료: 독일 재무부, 2010.1

<표 V-6> 2010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십억유로, %)

부처	2009	2010	증감률
총리실	1.8	1.8	-
외교부	3.0	3.1	3.3
내무부	5.6	5.5	-1.8
법무부	0.5	0.5	-
재무부	4.9	4.9	-
경제기술부	6.1	6.3	3.2
농업/소비자보호부	5.3	5.4	1.9
노동/복지부	126.3	153.1	21.2
교통건설부	26.7	26.3	-1.5
국방부	31.2	31.1	-0.3
보건부	7.6	12.3	61.8
환경부	1.4	1.5	7.1
가족부	6.4	6.5	1.6
후진국지원부	5.8	5.8	-
교육부	10.2	10.3	1.0

자료: 독일 재무부, 2009.6 / 주독일대사관, 2010.2

— < 2010년도 시행될 시민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 > —

- ◇ 총재정지원금은 200억유로를 상회할 전망
 - 자녀수당 지급, 자녀혜택 제공 및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에 약 23억유로 투자
 -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소득세 인하, 기본공제액 인상, 중소기업 혜택 증진을 위해 56억유로 제공
 - 2010년도 중산층 4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총 440유로, 실업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받을 시 142유로 추가 지급
 - 통근세 정책이 재정비뚤에 따라 30억유로 지급, 시민부담 완화정책으로 총 96억유로 배당 (요양보험 관련 재정지원 대폭 강화)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 경제위기에 따른 제1, 2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2009년의 491억유로에 이어 2010년도 차입금은 총 858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가을부터 시행된 경기부양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부담 완화, 고용시장 안정, 지속적인 투자, 교육,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
 - 2010년에는 공적의료보험제도(GKV)에 63억유로, 독일도시건설교통부(BMVBS)에 12억유로 등의 보조금 마련
 - 올해 1차 경기부양책에서 21억유로, 2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총 33억유로의 재정지원 예상
 - 공공기관 투자 및 연구 지원금으로 204억유로에 해당하는 특별기금인 투자 및 상환펀드(ITF) 조성
 - 2009~2010년 교육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40억유로 소요
 - 교육 및 연구에 86억유로가 소요됐으며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도로 소음공해 방지 등에 추가로 47억유로 투입 예정

나. 재정건전화

- 연방 상원 및 하원은 재정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 개정,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입금액을 감소시킬 것을 법으로 명시
 - 2009년 말 발표된 2010년 독일연방 차입금은 총 858억유로이며 2011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까지 차입규모가 GDP의 0.35% 또는 100억유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매년 100억유로 규모로 차입금을 축

소해 나갈 계획)

- 또한 2013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재정적자를 3%대로 감소

<표 V-7> 2010년도 수입 산정(2009년 12월 기준)

(단위: 십억유로)	
2010년도 정부 차입규모	85.8
금융 거래의 수입 및 지출의 차액	-1.0
경기부양을 위한 차입	-16.5
실질 차입 (structural net borrowing)	68.3
명목GDP (2009년 가을 기준)	2,399.0
GDP 대비 2010년도 실질 차입규모	2.8%
2016년도 0.35% 달성 위한 감소 비율	0.4%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2월

- 연방재무장관, 주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내 각 부처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나아가 각 정부의 재정계획을 조정함
 - 이를 위해 각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자체 예산의 현황 및 재정계획을 보고해야 함
 - 행정부처의 재정상태가 연방 또는 주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단은 해당 지역 행정부 관계자들의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음
 - 결의안은 주정부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결과를 문서화하여 발행함

다. 고용촉진·지원 (위 세출내역 중 노동시장 부문 참조)

- 2009년 가을 기준, 2010년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총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09년 봄 예측치보다 50만명 감소한 수치

- 2009년 12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실업자 수는 330만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만 6,000명이 증가한 규모
 - 2009년 12월 기준 독일 실업률은 7.8%이며 전년 대비 불과 0.4% 상승한 수준

- 독일정부가 실업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함
 - 정부는 조업단축을 통한 업무시간 조절(야근시간 단축 등)
 - 2010년부터 조업단축수당을 받는 자의 근무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시행중인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및 임금조정제도 등은 독일 실업률 증가를 막는 데 일조함

- 독일연방노동사회부에 배정되는 2010년 총예산은 1,470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총지출은 233억유로로 이는 수정예산안 발표 이전보다 60억유로 감소
 - 연방정부는 233억유로 중 160억유로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배정해 실업률 증가에 대응
 - 이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42억 6천만 유로 지급
 - 2010년 고용시장 전망 개선에 힘입어 연방노동청의 적자규모는 제1차 2010년 예산안보다 약 40억유로 감소
 - 지난 한 해 파산 증가로 연방노동청의 적자가 심화된 가운데 파산기금

(Insolvenzgeld)의 분담금 비율을 0.39%에서 0.41%로 상향 조정함

- 노동청은 또한 전문가 양성, 단기근로자 채용, 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등에 예산 소요

○ 실업자의 구직활동 목적으로 55억유로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제2차 경기 부양책에 남은 10억유로 소요 계획

○ 연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2010년 연방노동청의 전체 지출규모는 약 5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방정부 보조금 외 예산은 다음 항목에 지출될 예정

-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⁹⁾ 할당액으로 총 243억유로 지급

- 조업단축을 통한 기업의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약 30억유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2억 5천만 유로 지급

-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4억유로 배정

- 실업자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창업자의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보조금과 사회보장비로 6개월간 월 300유로 지원받음) 또는 창업 후 2년간 일정금액의 보조금 지급 등

□ 정부의 실업률 상승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독일 경제활동 수축현상은 생산량 감소 및 인건비 증가를 부름

○ 이에 따라 2010~2011년 실업률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고용시장 규모 확대 노력이 필수

9) 독일은 HartzIV법에 의해 취업자를 위한 고용시장 촉진 목적으로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와 사회부조금(Sozialhilfe)를 통합하여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라고 부름

VI. 영국

□ FY2010 : 2010년 4월 ~ 2011년 3월

□ 출처 : 『2009 Pre-Budget Report』¹⁰⁾(2009. 12. 09), (<http://www.hm-treasury.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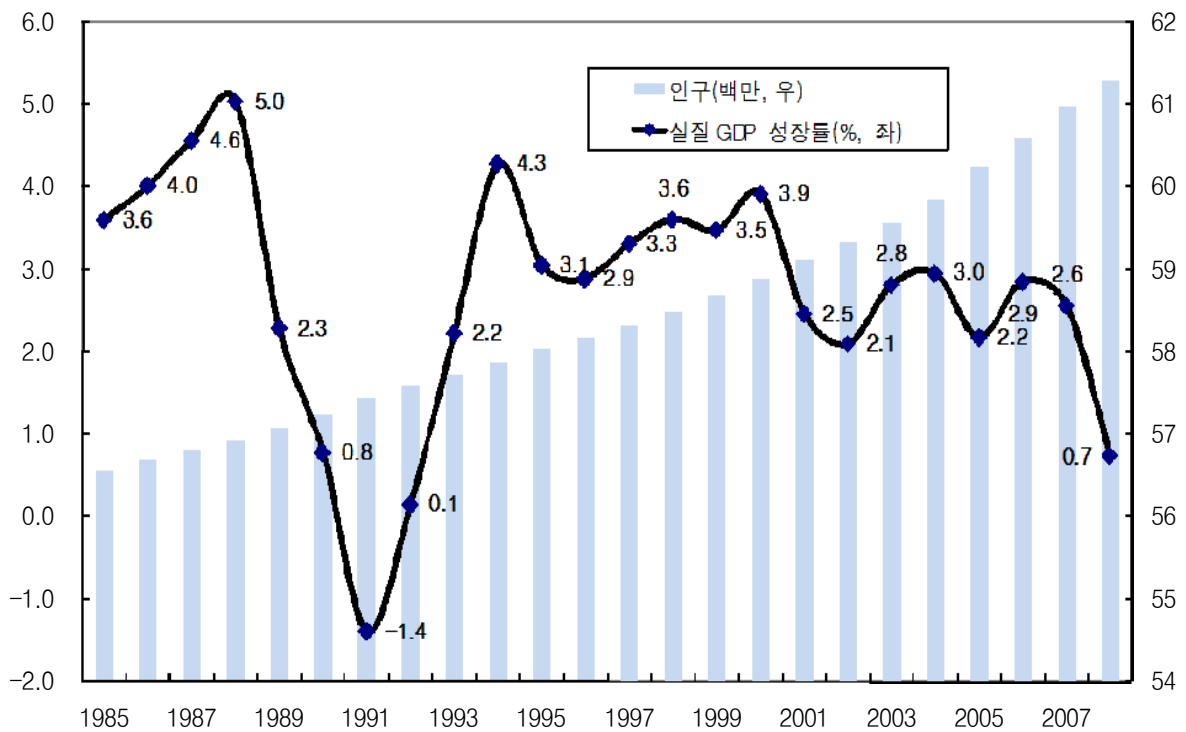
□ 환율 : 1파운드 = 약 1,993.8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1,865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61.0%(우리나라 107.0%)

□ 인구 : 6,135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10) 영국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전후인 3~4월에 예산안 발표.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전년 11월경 Pre-Budget을 발표하여 예산기조 및 내용에 대해 공유함. 예산안은 Pre-Budget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세입·세출내역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이번 Pre-Budget은 2010년 6월(예정)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급여정책을 내세우고 세금인상계획 및 지출삭감계획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노동당 정부는 당내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등 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태임.

<요 약>

- ◇ (경제전망) 영국 정부는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이후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
 - 2009년 GDP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악화된 -4.75%로 수정, 2010년에 플러스(1~1.5%)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 3.25~3.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

- ◇ (재정전망)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FY2010년 경상재정적자가 GDP의 -9.3%로 확대, FY2014년에 -3.2%로 축소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FY2010년 GDP의 65.4%, FY2014년 77.7%로 증가 전망

- ◇ (정책기조) “경기회복의 공고화, 성장과 기회의 제공”(Securing the recovery : growth and opportunity)이라는 기조하에 다음 세부 정책목표 제시
 - ① 거시안정성 유지
 - ② 금융시장개혁
 - ③ 기업·성장 지원
 - ④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 ⑤ 공공서비스 유지
 -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 (경상세입) FY2009예산안 전망보다 18억파운드 증가한 5,303억파운드로 예측
 - FY2010년 경상세입 GDP 비중은 36.0%로 FY2008년에 비해 1.1%p 감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FY2009년에 비해서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FY2012~2014년 GDP의 37.7% 유지 전망

- ◇ (지출)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 지출한도(DEL)
 - FY2010년 총관리지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7,066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로 3,139억파운드(전년 대비 8.3% 증가)
 - 부처별지출한도는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3,927억파운드(전년 대비 1.8% 증가)

- ◇ (경제위기 대응조치)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 기업활동 지원, 금융부문 개혁 등
 - (주택부양) 모기지 기준이자율 6.08%로 동결, 신규주택구입 대출지원 등
 - (기업지원) 기업금융보증제도 12개월 연장, 공자산(empty property) 면세 등
 - (금융부문 개혁) 금융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 금융산업 개혁 조치 추진

- ◇ (재정건전화)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 의회 제출 ('09.12.9)
 - 정부의 재정책임 의지에 신뢰성 부여, 중기재정계획 설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의회의 명백한 역할 부여
 - FY2015년까지 GDP 대비 차입의 지속적 감소, 순부채 비중의 증가 억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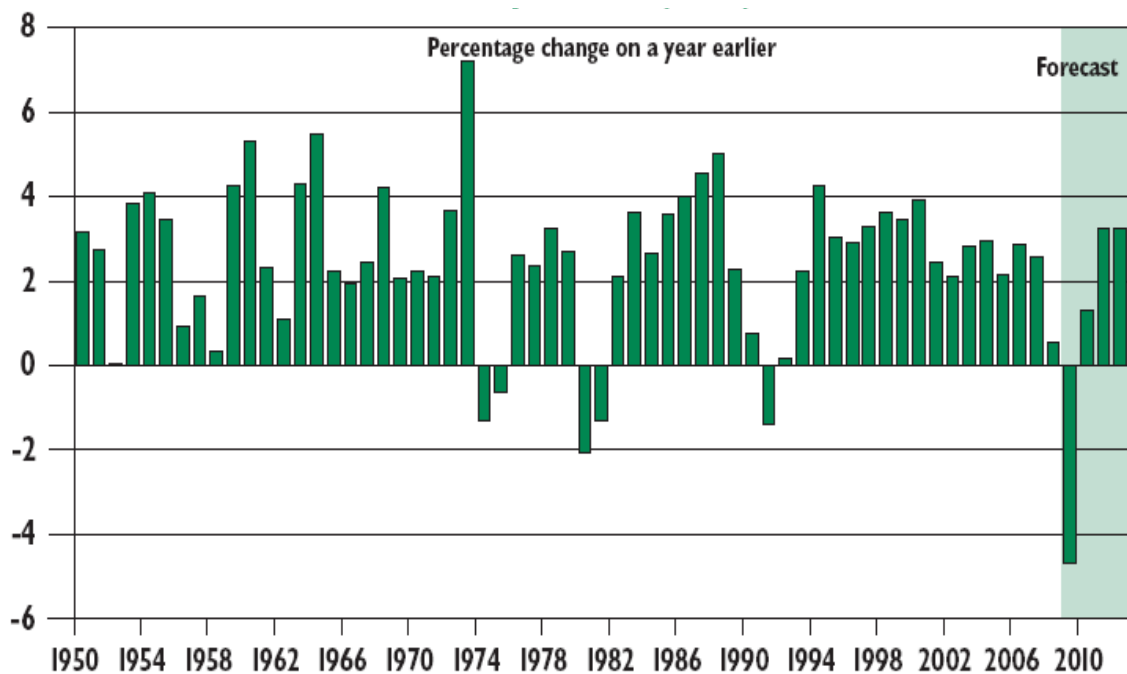
- ◇ (고용촉진·지원) 청년실업대책과 50세 이상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강화
 - 장기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청년일자리보장제도 강화
 -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50세 이상의 고용시장 신속 재진입을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09 Pre-Budget에서는 영국 경제의 안정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영국 GDP 성장률을 높게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2010년 3.25%, 2011년~2012년 4.25%로 2009 예산안 전망치에서 상향조정
 - 영국의 2009년 GDP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악화된 -4.75%로 수정,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1~1.5%)으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 3.25~3.5%에 이를 것으로 예측

[그림 VI-1] 영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1950~2012)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A : The economy Chart A4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09년 4분기에 2%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0년 1월 VAT인하 종료로 일시적 증가 예상

- 이후 생산갭(output gap)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CPI는 2010년 1.75%, 2011년 1.5%로 감소하다가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2012년에는 목표범위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표 VI-1> 영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00~'07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GDP 성장률	2.75	0.5	-4.75	1~1.5	3.25~3.75	3.25~3.75
- 민간소비	1.75	0.5	-2	0.25	2	2
- 민간투자	0.25	0.25	-2	-0.25	1	1.25
- 정부소비 및 투자	0.75	1	1	0.25	-1	-0.75
- 순무역	-0.25	0.5	0.75	0.5	0.5	0.5
소비자물가(CPI)	-	4	2	1.75	1.5	2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A : The economy

나. 재정전망

-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¹¹⁾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FY2009년 말(2010년 3월) 기준 공공부문의 순차입 규모는 1,776억파운드(GDP의 12.6%), 순부채 규모는 7,989억파운드(GDP의 55.6%)로 추정
 - 순차입 규모는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에 따라 FY2010년에 GDP의 12.0%에서 FY2014년 GDP의 4.4%까지 줄어들 전망

11) 금융시장 개입의 영향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 ex),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ex) 규모임. 순부채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에서 유동성 자산(liquid asset)을 제외하여 산출.

2009년 12월 말 기준 순부채(PSND) 규모는 GDP의 61.7%, 금융시장 개입을 제외한 순부채(PSND ex) 규모는 GDP의 52.5%임(Public Sector Finance Statistical Bulletin 2009.12).

- 경상 재정수지는 세입(6.4% 증가)보다 세출(6.6% 증가)이 늘어나 FY2010년에 GDP 대비 -9.3%까지 확대되었다가 FY2014년 GDP의 -3.2%로 축소될 전망
 - 경기변동을 조정한 재정수지는 FY2010년 GDP의 -5.4%에서 FY2014년 GDP의 -1.9%로 호전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FY2010년에 GDP의 65.4%, FY2014년 77.7%로 지속적 증가 전망
 -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의해 건전화 노력이 성공할 경우 FY2015년부터 순부채 규모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

<표 VI-2> 영국 일반정부부문 예산 총량

(단위: 십억파운드, %)

	2008 실적	2009 추정	전 망					
			2010	증감률(%) GDP 증감(%p)	2011	2012	2013	2014
경상예산								
세입(A)	532.4	498.1	530	6.4	576	617	656	694
(GDP, %)	(37.1)	(35.3)	(36.0)	(0.7)	(37.3)	(37.7)	(37.8)	(39.6)
세출(B)	563.8	607	647	6.6	666	686	707	729
(GDP, %)	(39.3)	(43.1)	(44.0)	(0.9)	(43.1)	(41.9)	(40.7)	(39.6)
감가상각(C)	18.7	19.2	20	4.2	21	22	23	24
(GDP, %)	(1.3)	(1.4)	(1.4)	(0.0)	(1.4)	(1.3)	(1.3)	(1.3)
경상재정수지 (D=A-B-C)	-50.1	-128.1	-137	6.9	-111	-91	-74	-59
(GDP, %)	(-3.5)	(-9.1)	(-9.3)	(-0.2)	(-7.2)	(-5.6)	(-4.3)	(-3.2)
자본예산								
총투자(E)	64	68.7	60	-12.7	50	48	45	47
(GDP, %)	(4.5)	(4.9)	(4.0)	(-0.9)	(3.3)	(2.9)	(2.6)	(2.6)
공제감가(F)	-18.7	-19.2	-20	4.2	-21	-22	-23	-24
(GDP, %)	(-1.3)	(-1.4)	(-1.4)	(0.0)	(-1.4)	(-1.3)	(-1.3)	(-1.3)
순투자(G=E+F)	45.3	49.5	39	-21.2	29	26	22	23
(GDP, %)	(3.2)	(3.5)	(2.7)	(-0.8)	(1.9)	(1.6)	(1.3)	(1.3)
순차입(H=G-D)	95.4	177.6	176	-0.9	140	117	96	82
(GDP, %)	(6.6)	(12.6)	(12.0)	(-0.6)	(9.1)	(7.1)	(5.5)	(4.4)
공공부문 순부채 (회계연도 말 기준)	618.8	798.9	986	23.4	1139	1270	1379	1473
(GDP, %)	(44.0)	(55.6)	(65.4)	(9.8)	(71.7)	(75.4)	(77.1)	(77.7)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2. 예산기조

□ FY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변경 계획이 없으며, FY2011~2014년까지 공공지출의 실질증가율은 평균 0.8%로 계획¹²⁾

- “경기회복의 공고화, 경제성장과 기회의 제공”(Securing the recovery : growth and opportunity)이라는 기조 아래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금융시장개혁 ③ 기업·성장 지원 ④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⑤ 공공서비스 유지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 6가지 세부 재정목표 제시

□ (거시안정성 유지)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한 가계·기업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 병행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NICs) 면제기준을 연 20,000파운드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의 기여율을 모두 0.5%p 인상하여 세입감소 방지
- FY2012년에 소득세율 중 높은 세율(40%) 과세구간을 현행(37,400파운드 초과)으로 동결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근로자, 고용주 연금기여금 포함)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의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제한

□ (금융시장개혁) 금융산업의 과도한 위험투자 방지, 금융안전성 확보, 투자은행 손실에 의한 부정적 파급효과 감소,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치 발표

- '09.12.9부터 '10.4.5까지 은행과 건설조합(building society)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discretionary bonus) 중 25,000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추가 50%의 원천세(payroll tax) 부과
- 모기지담보부 증권시장의 안정성·투명성·표준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커버

12)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 Pre-budget 연설(2009.12.9)에서, 중기재정(Spending Review)을 유보하고 향후 5년간(FY2010~2014) 부처별 지출한도를 평균 0.8% 이내로 통제한다고 발표. 공공지출의 삭감이 불가피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드본드(covered bond) 시장 육성, 비은행권 대출 활용방안 논의 추진

- 은행에 대한 과세 지침, 은행간 결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식 마련 등
- FY2011년 재정지원서비스(Money Guidance Service)에 2천만파운드 추가 지원, 무료상담서비스(Citizens Advice bureaux) 연장 운영에 500만파운드 지원

□ (기업·성장 지원) 경기회복 조치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마련

- 납세연기서비스 유지, ‘공자산율경감제(empty property rate relief)’의 한시적 확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연기
- 중소기업의 대출 편의를 위한 기업금융보증제도(12개월간 지속)에 5억파운드 추가 지원, 성장자금기금(growth capital fund) 신규 조성 등
- 2013년 4월부터 특허를 통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감면(Patent Box) 도입
- 저탄소투자지원을 포함한 전략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에 2억파운드 추가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보조와 세수증대를 위한 고소득자 부담 강화, 조세회피 방지책 등을 함께 추진

- 청년일자리보장제도 확대 시행에 3억파운드 재원 투입
 -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층(18~24세)에 최소 6개월간 일자리·실무경험 보장
- 2010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가정 자녀에게 초등학교 무료 급식 확대
- 2010년 4월부터 기초국가연금 2.5%, 자녀세액공제 20파운드를 인상하고 그 외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1.5% 인상
- FY2010년 상속세 공제를 현행 325,000파운드로 동결, 해외탈루 등 조세회피방지를 강화하여 연간 50억파운드 확보 계획(탈세액의 200%까지 가산세 부과)

- (공공서비스 유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부문의 ‘일선(frontline)’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효율화 추진
 - 의료, 교육 등 일선 공공서비스의 실질적인 삭감은 없음
 - NHS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출 총액이 증가하고, 교육지출은 실질적으로 0.7% 증가함
 - 경찰인력 등 공공서비스 인력을 유지하고 해외원조 규모도 2013년까지 유지
 - 정부효율화를 통해 FY2012년까지 110억파운드의 지출감축 계획
 - FY2012~FY2013년까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1%로 하여 34억파운드 절감
 - FY2012년 이후 공적연금서비스 개혁을 통해 10억파운드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업투자와 에너지 비용절감 가계에 추가 4억파운드 지원, 향후 3년간 저탄소에너지 부문에 150억파운드 규모 투자
 - 유럽투자은행의 저탄소 인프라 펀드에 1억유로 출자, 영국 내 저탄소산업에 1억 2천만 파운드 지원
 -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절감(greener)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400파운드) 지급 등 에너지효율화에 2억파운드 지원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0년부터 회사차량 과세 면제, 전기 밴(vans)의 경우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100% 적용 도입, 저탄소 교통 프로젝트에 추가 3천만 파운드 투자

3. 예산안 내역

가. 세입내역

- FY2010년 경상세입은 5,303억파운드로 2009 예산안 전망보다 18억파운드(약 0.3%), FY2009년 세입(추정치) 대비 6.4% 증가
 -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인지세, 법인세, VAT 등의 증가 예측
 - 실질적 주택가격 상승 가정(5%)으로 인지세를 26억파운드 증가한 93억파운드 추정
 - 경기회복으로 인해 법인세는 16억파운드 증가한 409억파운드로 예측, VAT는 8억파운드 증가한 742억파운드 추정
 - 소득세는 2009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나 NICs는 15억파운드 감소 전망
 - 경기회복으로 소득증가가 기대되기는 하나 시차를 고려하여 소득상승률을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5.5%로 가정

<표 VI-3> 경상세입

(단위: 십억파운드)

	세입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추정	FY2010예측	FY2008실적	FY2009추정	FY2010예측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53.5	140.4	144.7	0.9	-0.1	0
소득세 세액공제	-5.6	-6.2	-6.5	0.1	0	-0.3
NICs ¹⁾	96.9	94.8	98.1	0.4	-2.9	-1.5
VAT	78.4	67.2	74.2	0	3.5	0.8
법인세	43.7	34.1	40.9	0.3	-0.6	1.6
법인세 세액공제	-0.6	-0.7	-0.8	0	0	0
석유세	2.6	1.2	1.6	0	0.1	0.4
연료세	24.6	26.4	28	0	-0.2	-0.1
자본취득세	7.8	2.5	2.6	0	0.2	0.9
상속세	2.8	2.2	2.3	0	0	0.4
인지세	8	7.4	9.3	0	2.5	2.6
담배세	8.2	8.8	8.9	0	0.5	0.6
산업용주정(spirits)세	2.4	2.6	2.6	0	0	0
와인세	2.7	2.9	3	0	0.2	0.3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4	3.5	3.5	0	0.1	0.1
사행성(betting and gaming)세	1.5	1.4	1.4	0	0	-0.1
항공여객세	1.9	1.9	2.3	0	0.1	0.1
보험료세	2.3	2.3	2.3	0	-0.2	-0.2
쓰레기매립세	1	0.9	1.2	0	-0.1	-0.1
에너지환경세	0.7	0.7	0.7	0	0	0
콘크리트 제조용 공재채취세	0.3	0.3	0.3	0	0	0
관세	2.7	2.6	2.5	0	-0.1	-0.2
총국세	439.1	397	423.1	1.7	2.8	5.3
자동차세	5.6	5.7	6.1	0	0.1	-0.1
비거주재산세	22.9	23.7	24.6	0.1	-0.2	0
카운슬세 ²⁾	24.4	24.8	25.8	0	-0.1	-0.1
기타 ³⁾	15.7	16.4	19.2	0.4	-0.4	0.3
순조세 및 NICs⁴⁾	507.7	467.6	498.8	2.3	2.2	5.5
발생주의 조정	-4.2	1.3	1.7	0.2	1	-1.2
EU 분담금 공제	-5.1	-3.7	-4.6	0.1	0.4	0.2
공기업 법인세 지출 공제	-0.2	-0.2	-0.2	0	0	0
세액공제 조정 ⁵⁾	0.6	0.7	0.8	0	0	0
이자 및 배당	7	4.4	4.7	-0.5	-1.2	-1.6
기타수입 ⁶⁾	26.7	28.1	29.2	-0.4	-0.3	-1
총수입	532.4	498.1	530.3	1.7	2.1	1.8
memo: 북해세입 ⁷⁾	12.9	7	8.4	0	0.1	1.8

- 주: 1) 은행 원천세(payroll tax) 포함
 2) 카운슬세(Council tax) 증가는 매년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
 3) VAT 환급, 국가복권기금 수입 포함
 4) VAT 연계 EU 분담금, '전통적 EU 예산'(traditional own resource) 분담금 포함
 5) 세액공제는 마이너스 세입으로 포함. 국민계정에서는 지출로 분류
 6) 지방정부에 의해 지출되는 운영수익, 임대,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포함
 7) 북해(North Sea)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로 구성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FY2010년 경상세입은 GDP 대비 36.0%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FY2008년에 비해 1.1%p 감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FY2009년에 비해서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12~2014년에 37.7%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표 VI-4> 경상세입 GDP 대비 비율

(단위: %)

	2008 실적	2009 추정	전 망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0.7	10.0	9.8	10.2	10.6	10.8	11.0
NICs ¹⁾	6.8	6.7	6.7	6.9	6.9	7.0	7.0
비북해(Non-North Sea) 법인세	2.3	2.0	2.3	2.1	2.5	2.4	2.4
세액공제	-0.4	-0.5	-0.5	-0.5	-0.5	-0.5	-0.5
북해 세입 ²⁾	0.9	0.5	0.6	0.6	0.6	0.5	0.4
VAT	5.5	4.8	5.0	5.3	5.2	5.1	5.0
개별소비세 ³⁾	2.9	3.1	3.1	3.1	3.1	3.0	2.9
기타	6.8	6.6	6.8	6.9	6.9	6.9	6.9
순세입 및 NICs⁴⁾	35.4	33.2	33.9	34.9	35.3	35.3	35.3
발생주의 조정	-0.3	0.1	0.1	0.2	0.3	0.2	0.2
EU 분담금 공제	-0.4	-0.3	-0.3	-0.3	-0.3	-0.3	-0.3
기타수입	2.4	2.3	2.3	2.5	2.5	2.6	2.5
총세입	37.1	35.3	36.0	37.3	37.7	37.8	37.7

주: 1) 은행 원천세(payroll tax) 포함

2)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 북해법인세 포함

3) 유류, 주류, 담배세

4) VAT 연계 EU 분담금, '전통적 EU예산'(traditional own resource) 분담금 포함. 현금기준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나. 세출내역¹³⁾

□ FY2010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전년 대비 4.6%,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49억파운드(약 0.7%) 증가한 7,066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Annual Managed Expenditure: AME)은 3,13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3)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연간관리지출(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L)의 합.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8.3% 증가,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는 3,927억과
운드로 전년 대비 1.8% 증가

<표 VI-5>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십억파운드)

	총관리지출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경상지출						
경상 DEL	321.2	342.2	353.4	-3.1	0.1	1.2
현금성 DEL	301.6	319.5	329.8	-1.4	-0.4	1.0
비현금	19.5	22.7	23.6	-1.7	0.5	0.2
경상 AME	242.7	264.8	293.6	2.5	-1.1	1.1
사회보장급여 ¹⁾	149.8	163.8	169.5	-0.3	-0.9	-1.4
세액공제 ¹⁾	19.8	22.1	22.8	0.0	0.5	1.0
순공공서비스연금 ²⁾	3.3	4.1	4.8	0.3	0.0	0.2
국가복권	1.0	0.9	0.9	0.1	0.0	0.1
BBC 내국 서비스	3.4	3.5	3.7	0.0	0.0	0.0
기타부처지출	0.9	-0.4	2.0	0.1	-2.8	0.3
순EU분담금 (Net expenditure transfers to EC institutions) ³⁾	3.1	6.6	7.4	0.0	0.9	-0.5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6.8	27.0	28.3	-0.6	-0.9	-0.2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30.5	30.7	44.4	0.1	3.5	1.5
AME 예비비(margin)	0.0	0.9	1.8	0.0	0.0	0.0
회계조정	4.0	5.4	8.1	2.9	-1.5	0.2
공공부문 경상지출	563.8	607.0	647.1	-0.6	-1.0	2.2
자본지출						

<표 VI-5>의 계속

	총관리지출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자본 DEL	48.1	56.6	52.7	-0.2	-1.1	1.1
자본 AME	15.9	12.1	6.8	8.0	6.4	1.5
국가복권	0.5	1.0	0.9	-0.1	0.0	0.0
지방채정 지출	7.4	5.8	4.7	2.9	1.4	0.8
공기업 자체(own-financed)지출	6.8	7.1	7.4	-0.4	-0.3	-0.2
중앙정부 보조금(공공부문 은행)	9.9	3.0	0.0	9.9	3.0	0.0
기타 자본지출	-0.4	1.4	1.4	-0.8	-0.1	0.5
AME 예비비(margin)	0.0	0.0	0.0	0.0	-0.1	-0.2
회계 조정	-8.4	-6.2	-7.5	-3.6	2.4	0.6
공공부문 총투자	64.0	68.7	59.5	7.8	5.3	2.7
감가상각 공제	-18.7	-19.2	-20.1	-0.1	0.4	0.6
공공부문 순투자	45.3	49.5	39.5	7.7	5.7	3.3
총관리지출⁴⁾	627.8	675.7	706.6	7.1	4.3	4.9
DEL	357.7	385.9	392.7	-3.0	-1.5	2.2
AME	270.1	289.9	313.9	10.2	5.7	2.7

주: 1) FY2008년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을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순공공서비스연금(Net public service pensions) 지출은 국민계정 기준으로 작성
 3) AME 지출만 포함. GNI 연계 EU분담금에서 영국이 받고 있는 EU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4)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금융시장 개입의 한시적 효과 제외)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AME) 2009 예산안보다 높게 가정한 인플레이션과 정부채수익률 변화로 예산안 전망보다 27억파운드(약 0.9%) 증가
 - 사회보장급여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2,936억파운드로 전년보다 증가세(9.3%) 완화
 - 세액공제(Tax credits)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228억파운드 규모

- 순EU분담금 중 AME 지출부분은 74억파운드로 전년보다 8억파운드 증가
 - 중앙정부 총채무이자는 차입증가와 금리인상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한 444억파운드 규모
- (DEL¹⁴)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22억파운드(약 0.6%) 증가. FY2010년은 중기재정(CSR2007)의 마지막 기간으로 CSR에서 설정된 범위내에서 부처별 지출 계획
- 보건부(Health) 지출은 대부분 NHS 지출로 경상지출 1,040억파운드, 자본지출 47억파운드 규모임. 전년 대비 경상지출은 약 3.9% 증가, 자본지출 약 13% 감소
 - 아동·학교·가족부(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지출한도는 경상지출 513억파운드(전년 대비 4.3% 증가), 자본지출 67억파운드(전년 대비 9.5% 감소)
 - FY2009년 지출에 이월금에서 추가 1억 3천만파운드 배정¹⁵)
 - UN 기준에 따른 교육지출은 892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
 - 국방부(Defence) 지출상한은 경상지출 367억파운드, 자본지출 88억파운드 규모로 전년보다는 각각 5.7%, 2.2% 감소
 - 군사작전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금 25억파운드 추가
 - 사회적 주거대책(Social Housing Package) 재원 3억 5천만파운드를 교통부(Transport)에서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로 이전

14) FY2008년에 2009 예산안 추정치보다 30억파운드 감소한 실적치를 기록

15) 'Building schools for future', 'academies programmes' 에 배정

<표 VI-6> 부처별 지출한도

(단위: 십억파운드)

	경상지출			자본지출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46.8	49.2	51.3	5.5	7.4	6.7
Health	92.3	100.1	104.0	4.4	5.4	4.7
of which: NHS England	90.7	98.4	102.3	4.2	5.3	4.6
Transport	5.7	6.4	6.4	7.2	8.0	7.3
CLG Communities	4.2	4.5	4.5	7.1	9.1	6.4
CLG Local Government	24.7	25.6	26.3	0.1	0.2	0.1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8.0	19.1	19.2	2.1	3.0	2.3
Home Office	9.2	9.6	9.8	0.8	0.8	0.8
Justice	9.1	9.6	9.4	0.9	0.9	0.7
Law Officers' Departments	0.7	0.7	0.7	0.0	0.0	0.0
Defence	36.7	38.9	36.7	8.7	9.0	8.8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1	2.1	1.6	0.2	0.2	0.2
International Development	4.8	5.4	6.2	0.9	1.4	1.6
Energy and Climate Change	0.4	1.1	1.1	1.7	2.1	2.0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6	2.7	2.7	0.6	0.7	0.6
Culture, Media and Sport	1.6	1.7	1.7	0.9	0.5	0.6
Work and Pensions	8.0	8.9	9.8	0.1	0.3	0.3
Scotland	24.6	25.6	26.1	3.3	4.0	3.2
Wales	12.0	13.6	14.0	1.6	1.7	1.8
Northern Ireland Executive	8.0	8.4	8.7	1.2	1.1	1.1
Northern Ireland Office	1.3	1.2	1.2	0.1	0.1	0.1
Chancellor's Departments	4.5	4.4	4.2	0.3	0.4	0.2
Cabinet Office	2.1	2.3	2.4	0.4	0.4	0.4
Independent Bodies	0.8	0.9	1.0	0.0	0.1	0.1

<표 VI-6>의 계속

	경상지출			자본지출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Modernisation Funding	0.0	0.3	0.2	-	-	-
Reserve	0.0	0.4	4.0	0.0	0.8	2.8
Allowance for shortfall	0.0	-0.6	0.0	0.0	-0.8	0.0
DEL 소계	321.2	342.2	353.4	48.1	56.6	52.7
	FY2008 실적		FY2009추정		FY2010계획	
감가상각	11.6		13.0		13.5	
총DEL	357.7		385.9		392.7	
총교육지출 ¹⁾	81.4		88.0		89.2	

주: 1) 교육지출은 UN의 정부기능 분류기준에 따라 정의함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 (가계·기업지원)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08 Pre-budget 이후 고용지원 정책, 주택부양 정책,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용촉진) 2010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일자리와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도 시행
 - 2008 Pre-budget에서 발표한 30억파운드 규모의 고용지원사업(Jobcentre Plus, New Deal Programme) 추가지원을 통해 70%의 구직자가 조기취업 달성
 - 미래형 일자리기금(Future Jobs Fund)을 통해 9만 5천개의 청년 일자리 지원
 - (주택부양 정책) 모기지 기준이자율을 향후 6개월간 6.08%로 동결, FY2010년 신규주택구입 대출지원에 1억 5천만파운드 재원 마련 등
 - 2008년 9월에 발표한 한시적 인지세 면제조치(2009.12.31 종료)로 24만건의 거래에 혜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 FY2010 예산안에 주택토지공급 방안, 주택관련 규제 비용에 대한 정부기준과 다양하고 건설한 주택건설산업 추진 방안을 마련
 - 2010년 초에 민간 임대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및 투자장벽 등에 관한 정책 컨설팅 보고서 발표
 - (기업지원) 기업금융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 Scheme)와 전략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한시적 중소기업 지원책에 이어 미래성장동력 지원 정책 마련
 -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투자(2억 9천만파운드), 기업금융보증제도 12개월 연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자본기금(Growth Capital Fund) 조성 등 대책 마련
 - 2009년 3월에 발표한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¹⁶⁾ 납부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FY2009년에 약 10억파운드의 기업 현금유동성 지원

- 초기자본공제 4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등 2009 예산안의 한시적 법인세 경감 조치에 이어, FY2010년에는 과세표준이 18,000파운드 이하 공자산(empty property)에 대해 70% 면세 적용

□ (자본지출 조기집행) 2008 Pre-budget에서 발표한 30억파운드 중 2009년 12월 9일 현재까지 17억파운드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

- 도로기반 확충에 4억파운드, 난방효율화제도(Warm Front Scheme)에 1억파운드 지원, 직업훈련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 주거대책 등에 재원투입
- 2009 Pre-budget에서 난방효율화제도와 녹색(greener) 보일러 사업에 추가적으로 2억파운드 지원 발표
- 2009 예산안에서 6억파운드의 신규 주택건설 및 주택사업 투자 발표, 영국미래구축(Building Britain's Future) 계획에 15억파운드 규모 주거지원 포함

□ (금융부문 지원) '08.10월부터 긴급 금융구제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2009 Pre-budget에서는 '09.4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

- 금융산업의 과도한 위험투자 방지, 금융안전성 확보 조치 등
- 은행업계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5,000파운드 초과분에 추가 50%의 원천세(payload tax) 적용
- 모기지담보부 증권시장 개선, 은행에 대한 과세 지침 마련 등
-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조(State aid) 승인 건에 한하여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 단기(2개월) 연장

16) 'business rates'는 비거주재산세(Non-Domestic Rates)로 사업용 자산에 부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포함)에게 부과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 예산안에서 인프라금융기구(Infrastructure Financing Unit) 설립 발표
 - 37억파운드의 재원을 포함한 23개 PFI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조건을 확정(financial close)

나. 재정건전화

-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 의회 제출
 - 재정책임법안은 입법을 통한 최초의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 FCP)으로, 정부의 재정책임 의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의회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설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명백한 역할 부여
 - FCP는 FY2009~FY2015년까지 적용
 - 공공부문 GDP 대비 순차입 규모를 4년 이내에 FY2009년 전망치(12.6%)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보조입법을 통해 FY2013년에 GDP의 5.5% 이하로 줄일 계획
 - FY2009~FY2015년 동안 매년 GDP 대비 차입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FY2015년까지 공공부문 순부채의 GDP 비중 증가 억제
- 세수 증대와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NICs 효율 인상(0.5%p)과 고소득자(기여금 포함 15만파운드 이상)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제한을 통해 세입 증대
 - FY2011년 이후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연평균 실질증가율 0.8% 이내), 공공부문 순투자를 FY2013년까지 GDP의 1.25%로 축소

다. 고용촉진·지원

- (실업 추이 및 전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청구자 수가 경기회복 예상시점인 2010년 중반 이후로 점차 감소할 전망
 - 16세 이상 인구의 2009년 3사분기 실업자 수는 246만명, 실업률은 7.8%¹⁷⁾
 -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0만명, 전년 대비 629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대비 2.0%p 증가
 -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은 25.1%로 전년 대비 1.5%p 증가
 - 2010년 중반에 175만명까지 JSA 청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JSA 청구자 수가 2012년에 150만명, 2014년에 12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OECD의 영국 실업률 전망은 2009년 8.0%, 2010년 9.3%, 2011년 9.5%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¹⁸⁾

- (노동시장 지원책) 실업률을 완화하고 구직수당 수급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 Pre-budget, 2009 예산안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적 정책 마련
 - (청년고용 지원) 청년취업지원(Backing Young Britain) 캠페인에 3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멘토링, 수습, 현장경험, 인턴쉽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지원
 - (청소년 취업훈련지원) 2010년 1월 기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16~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을 지급하여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
 - (정리해고 대응)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와 정리해고 전 근로자의 이직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서비스(Rapid-Response Service)를 3,000명 이상의 고용주가 이용. 2008 Pre-budget 이후 재원을 두 배로 투입함
 - (고용지원센터) 15,000명까지 증가한 고용지원센터(Jobcentre Plus)의 개별상담·지

17)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2009. 11

18)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6

- 원 인력의 효과적 업무수행으로 구직수당 수급자의 70%가 6개월 이내 조기 취업
- (장기실업대책) 2009년 4월 이후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를 유지한 12,000명 이상이 포괄적인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음
 -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창업지원을 포함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 고용주에게 최고 2,500파운드 지원

□ 2009 Pre-Budget 고용촉진·지원 정책

- (청년실업대책)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도를 강화
 - 추가로 3억파운드를 투입하여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18~24세)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보장
 - FY2009 예산안에서 12억파운드를 투입하여 1년간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모든 청년(18~24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 및 직업훈련 보장 발표
 - : ‘10만 신규 미래형일자리기금(100,000 new Future Jobs Fund)’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 포함. 이 기금은 현재까지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 환경서비스, 스포츠 강사 등 9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달성
- (50세 이상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지원센터와 전문인력업체(specialist provider)를 통해 50세 이상의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신속하게 재진입하도록 추가 지원
 - 2011년 4월부터 주 16시간 이상 일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 확대 적용(현행 주 30시간 이상)
- (기타 근로유인 정책) 최저임금, 급여 및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를 통한 소득이 실업관련 급여보다 많아지도록 조정(‘Better Off in Work’ credit)

(참고) 2009 Pre-budget 재정정책 연도별 적용 규모

(단위 : 백만파운드)

주요정책	구분	2009	2010	2011	2012
재정건전성					
국민보험 기여금 비율 인상(NICs 0.5%p)	세입	0	0	+4,640	+4,890
연금과세 조정(소득기준 변경)	세입	-10	-40	0	+500
소득세 최고과세구간 동결(FY2012)	세입	0	0	0	+400
은행 특별상여금 50% 과세	세입	+550	0	0	0
FY2010년 상속세 공제 동결	세입	0	+80	+170	+190
보험프리미엄세(조세회피 방지)	세입	+5	+10	+10	+10
물가연동국채(조세회피 방지)	세입	0	+40	+65	+40
기업지원					
공자산 경감세율 한시적용	세입	0	-135	+10	0
소규모 기업 법인세율 인상 연기	세입	0	-10	-380	-110
특허감면 FY2013~	세입	0	0	0	0
전략투자자금 추가 지원	지출	0	-110	0	0
환경보호					
법인차량 과세구간 조정 FY2012~	세입	0	0	0	+120
에너지절감 유인 정책	지출	0	-85	0	0
가계지원					
학교 무료급식 확대	지출	0	-140	0	0
복지급여 인상	지출	0	-700	0	0
개인재정지원서비스	지출	0	-10	0	0
근로장려세액공제 : 65세 이상 2010.4~	지출	0	-5	-	-
주택급여 2011~	지출	0	-40	-	-
모기지 이자 지원	지출	-25	-70	0	0
총재정정책 규모¹⁾		+415	-1,240	+3,535	+5,095
기타					
군사작전 예비비	지출	0	-2500	0	0
공공부문 경상지출	지출	0	0	-7,700	-6,900

주: 총재정정책 규모는 2009 예산안 이후 발표된 정책을 포함. 표에 열거된 정책들은 2009 Pre-budget 발표 정책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표 수치 합계와 제시된 총재정정책규모는 일치하지 않음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Table 1.2

Ⅶ. 호주

□ FY2009-10 : 2009년 7월 ~ 2010년 6월

□ 출처

-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 2009-10 Budget Paper No.1 ~ No. 2, 2009. 5
- 2008-09 Final Budget Outcome, 2009. 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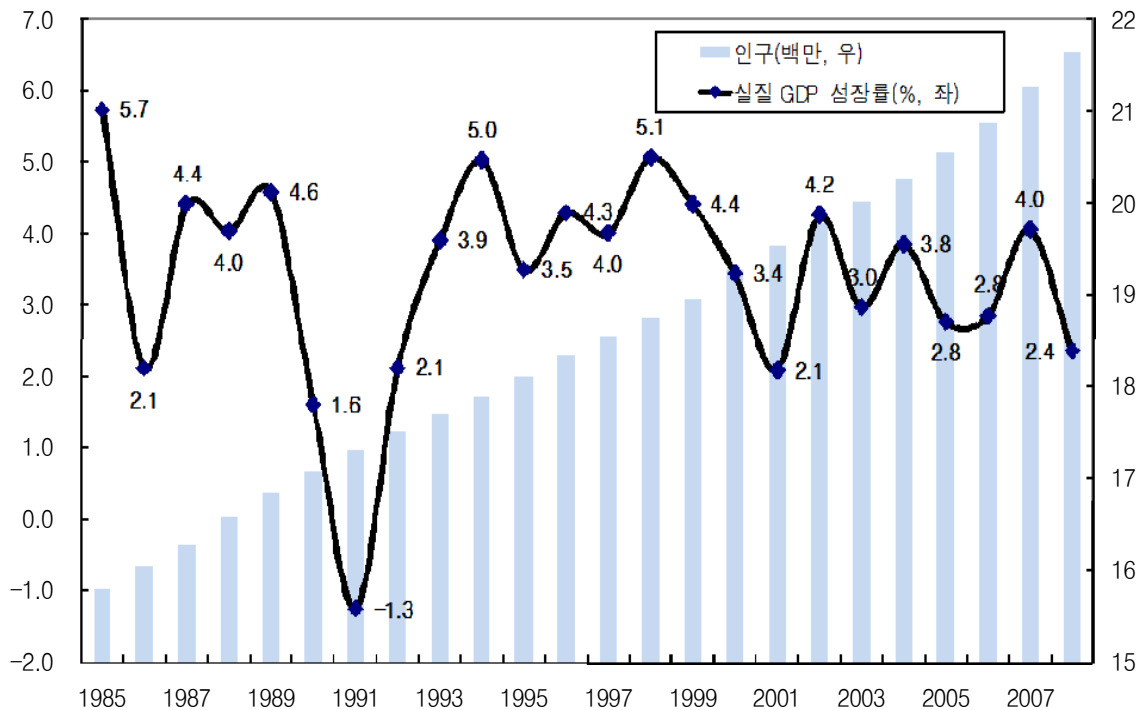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1,004.5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8,312억달러(우리나라 0.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49.1%(우리나라 107.0%)

□ 인구 : 2,151.4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

- 호주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기와 시기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결과 다소 개선된 모습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 호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어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필요한 상황
- 2009-10연도 예산수지는 577억호주달러(GDP 대비 -4.7%)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적자수준은 점차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2009-10 예산안은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 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2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 기간시설(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 일자리 지원 및 연금 개혁을 위한 지출 확대
-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어려운 선택과 명백한 전략(Hard choices and a clear strategy) 마련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2009-10년도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06억호주달러로 전망
- 2009-10년도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한 3,382억호주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조치

- 2009-10예산안 이전에 총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수행하여 2009-10년도에 2.75%p, 2010-11년도에 1.5%p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 2009-10예산안의 주안점인 220억호주달러(GDP 대비 1.8%)규모의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로 2009-10년도의 경제성장률 0.75%p 제고 및 연간 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

○ 재정건전화

- 경기회복 시점 이후부터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5-16년도에는 예산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고용 촉진·지원

- 호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리해고 및 실업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공약(Jobs and Training Compact)”을 발표하여 2012-13년도까지 약 15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현재까지 수행중인 총 5차례의 정부조치로 인해 최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호주경제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경기와 시기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결과 다소 개선된 모습
 - (성장)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예산안 발표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성장률을 상향 조정
 - 예산안에서는 경제성장률을 2009-10년도에 -0.5%, 2010-11년도에 2.25%로 전망
 - 반기 경제재정보고서(MYEFO)에서는 2009-10년도에 1.5%, 2010-11년도에 2.75%로 전망
 - (고용) 고용증가율은 2009년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9-10년도 0.25%, 2010-11년도에 1.5%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또한 2009-10년도에 6.75%로 최고점에 달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예산안 전망시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이 호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어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는 필요한 상황
 - 민간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경기부양 조치를 서서히 줄여나갈 것임

<표 VII-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성장률	0.00	-0.50	1.50	2.25	2.75	4.50	4.00	4.50	4.00
고용증가율	-0.25	-1.50	0.25	1.50	1.50	2.50	2.25	2.50	2.00
실업률	6.00	8.25	6.75	8.50	6.50	7.50	6.00	6.50	5.75
소비자물가지수	1.75	1.75	2.25	1.50	2.25	2.00	2.25	2.50	2.25
경상성장률	5.75	-1.50	1.25	3.75	5.50	6.25	6.25	6.75	6.25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나. 재정전망

- 호전된 경제전망에 힘입어 중기 예산수지 및 순채무는 예산안 발표시점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전망
 - (예산수지) 2009-10년도는 예산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577억호주달러(GDP 대비 -4.7%)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적자수준은 점차 감소할 전망
 - 경기와 세입징수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림
 - (순채무) 2009-10년도 예산안 전망보다 85억호주달러 감소한 452억호주달러(GDP 대비 3.7%)로 예상되고 이후 2013-14년도에 GDP 대비 10% 수준까지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19-20년도에 GDP 대비 2.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09-10년도 순채무 감소는 주로 호주연방국채의 가치 하락에 기인
- 호주정부는 점차 긴축적 재정기조로 운영하여 재정적자규모 감소를 위한 노력
 - 경기부양 조치의 점진적인 철회, 경제회복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 증가, 지출증가율 억제 등으로 2009-10년도 GDP 대비 -4.7%의 예산수지 적자를 2012-13년도에 GDP 대비 -1.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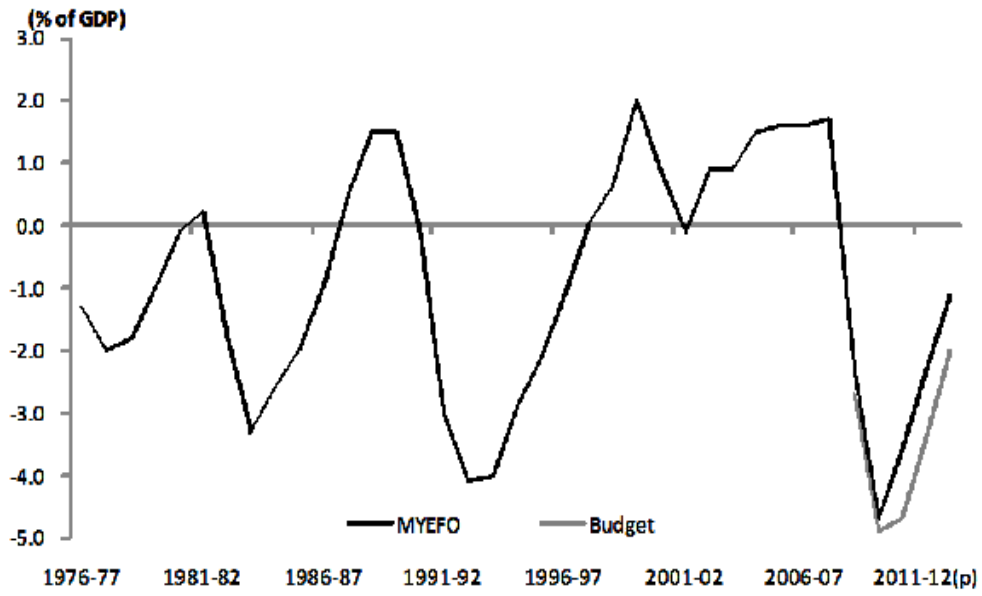
<표 VII-2> 호주 일반정부부문 예산총량 (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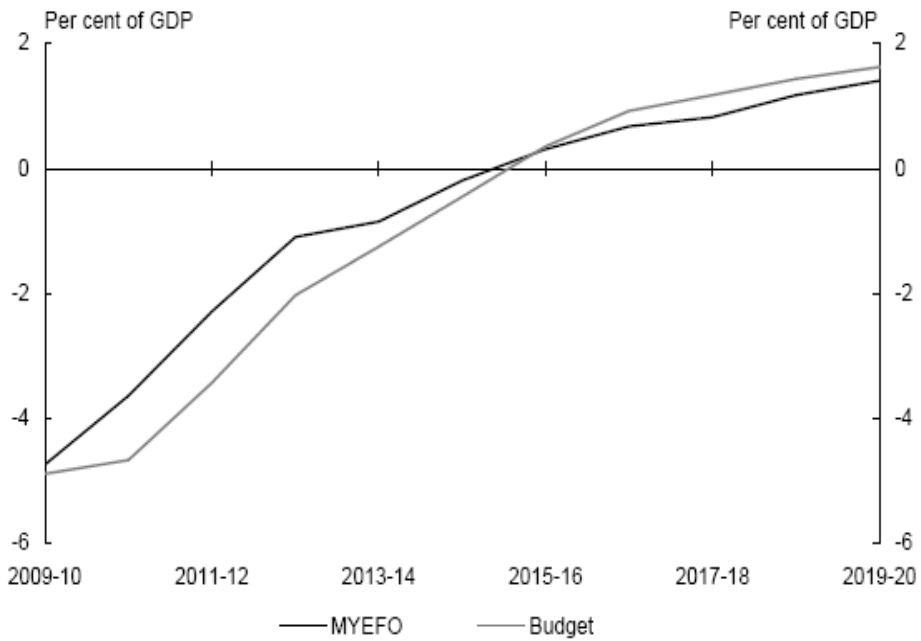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08-09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298.9	290.6	291.8	294.8	303.9	320.8	335.9	349.7	364.9
GDP 대비 비율	24.9	24.7	24.0	24.1	23.7	24.7	24.7	25.2	25.2
재정지출(Expenses)	324.6	338.2	340.2	344.5	345.0	356.4	358.5	375.0	378.1
GDP 대비 비율	27.0	28.7	28.0	28.2	26.9	27.4	26.3	27.0	26.1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25.6	-47.6	-48.3	-49.7	-41.1	-35.6	-22.6	-25.3	-13.2
순자본투자 (Net capital investment)	4.1	5.5	6.0	6.3	5.4	6.1	5.6	5.0	4.7
재정수지(Fiscal balance)	-29.7	-53.1	-54.4	-56.0	-46.5	-41.8	-28.2	-30.3	-18.0
GDP 대비 비율	-2.5	-4.5	-4.5	-4.6	-3.6	-3.2	-2.1	-2.2	-1.2
예산수지 ¹⁾ (Underlying cash balance)	-27.1	-57.6	-57.7	-57.1	-46.6	-44.5	-31.2	-28.2	-15.9
GDP 대비 비율	-2.3	-4.9	-4.7	-4.7	-3.6	-3.4	-2.3	-2.0	-1.1
순채무(Net debt)	-16.1	53.7	45.2	112.2	90.4	161.7	121.8	188.2	135.5
GDP 대비 비율	-1.3	4.6	3.7	9.2	7.0	12.4	8.9	13.6	9.4

주: 1)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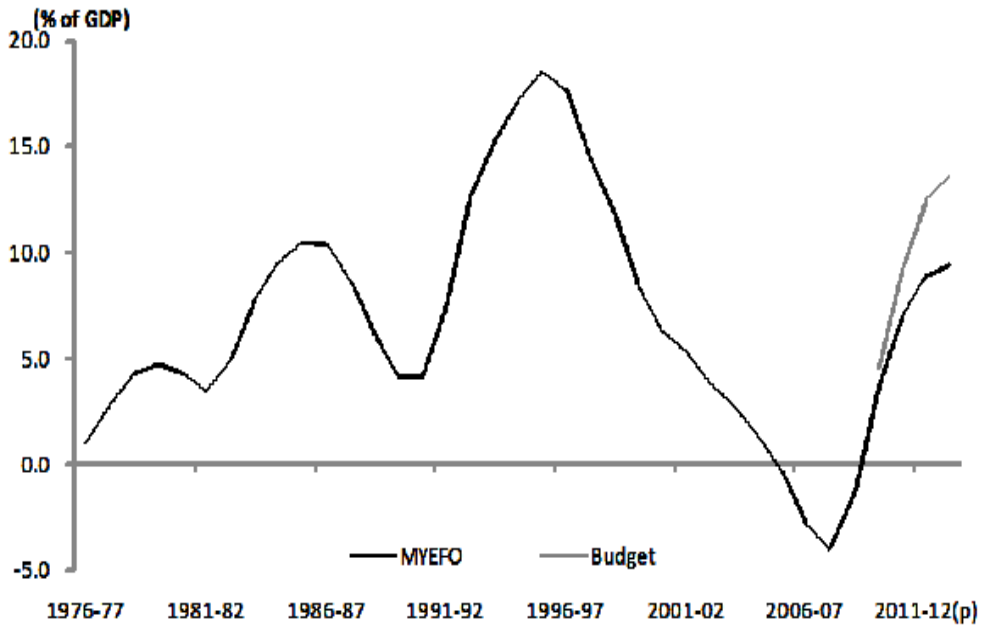
[그림 VII-1] 예산수지 추이 및 중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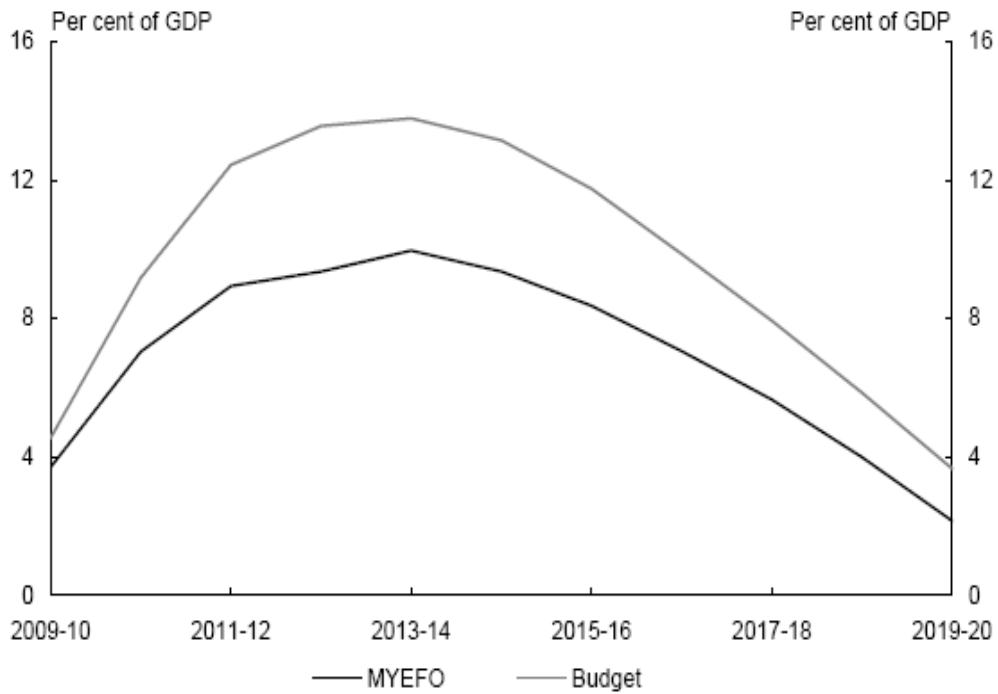
[그림 VII-2] 예산수지 장기전망



[그림 VII-3] 순채무 추이 및 중기전망



[그림 VII-4] 순채무 장기전망



- 호주 정부는 중기 재정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침체기와 경제 회복기로 나눈 2단계 재정전략을 계획
 - (중기 재정전략) ① 경제 순환기 전반에 걸친 예산 흑자 달성 ② 2007-08년도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 유지 ③ 중기적(medium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 (1단계 재정전략)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기간에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산적자를 주도하는 세입과 지출의 변동을 감안
 - 기존의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 우선성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로 경기진작을 수행
 - (2단계 재정전략)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정부는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입여력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2007-08년도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유지
 - 예산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평균 실질지출증가율을 2% 수준으로 제한

2. 예산기조

- 2009-10 예산안은 “미래 대비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Supporting Jobs Now by Investing in Our Future)”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220억호주달러 규모의 국가 기간시설(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¹⁹⁾
 - 생산성 및 성장 제고를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국가광역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자
 - 청정에너지개발과 태양열 및 탄소포집 등 주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 세계적인 대학 및 병원을 위한 교육·보건 인프라에 투자
 - 일자리 지원 및 연금 개혁을 위한 지출 확대
 - 일자리 지원과 수요 제고를 위한 노력
 - 공정하고 지속적인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개혁 수행
 -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유급 육아휴가 계획안 마련
 -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어려운 선택과 명백한 전략(Hard choices and a clear strategy) 마련
 -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을 수행하여 2015-16년도에 흑자예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19) 세부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84억호주달러 지출,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국가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대 430억호주달러 투자(초기 정부투자금액은 47억호주달러), 청정에너지개발을 위해 36억호주달러 투자, 교육 인프라 및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해 각각 26억호주달러 및 32억호주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09-10년도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06억호주달러로 전망
 - 조세수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수준
 - 세계경기 악화는 1차적으로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수 감소
 - 세외수입은 주로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Scheme for Large Deposits)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호주중앙은행의 배당금 증가로 전년 대비 12.8% 증가

<표 VII-3>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재정수입(Total Revenue)	298.9	290.6	294.8	320.8	349.7
조세수입	278.6	267.7	276.0	301.9	331.0
세외수입	20.3	22.9	18.9	18.9	18.7
GDP 대비 비율	24.9	24.7	24.1	24.7	25.2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0 Budget Paper No. 1,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나. 세출내역

- 2009-10년도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지출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한 3,382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I-4> 일반정부부문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일반 공공서비스	17,196	17,755	18,739	19,598	20,280
국방	19,190	20,952	20,021	20,101	19,885
공공질서 및 안전	3,558	3,901	3,781	3,759	3,861
교육	22,601	35,222	32,087	28,630	29,878
보건	49,146	51,223	53,201	55,619	57,628
사회보장 및 복지	124,581	110,994	116,503	120,574	123,957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080	9,089	5,571	4,266	4,005
문화	3,107	3,099	3,000	2,938	2,944
에너지·연료	5,806	8,403	7,899	7,044	6,454
농림수산	2,723	3,407	2,791	2,852	2,915
광업, 건설·제조	1,911	1,681	1,962	1,947	1,906
교통·통신	6,941	5,482	5,637	6,686	6,826
경제(economic affairs)	6,507	8,183	7,994	7,854	7,450
기타 지출	56,221	58,822	65,344	74,518	87,00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24,569 (27.0)	338,213 (28.7)	344,528 (28.2)	356,388 (27.4)	374,990 (27.0)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0 Budget Paper No. 1, 2009. 5

Final Budget Outcome, 2009. 9

- (교육) 교육분야 지출이 352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
 - 교육혁신계획(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initiative)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공교육협약(National Education Agreement)에 따른 국립 학교에 대한 지원금 증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증가 등에 기인

- (기타 지출) 주 및 준주에 대한 일반세입보조 증가와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 등의 기타지출이 58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2009-10년도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지출이 91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78.9% 증가
 - 공공주택 건설투자를 포함하여 일회성 경기부양조치에 주로 기인

- (국방) 국방시설 운영자금 증가 등의 국방분야 지출이 210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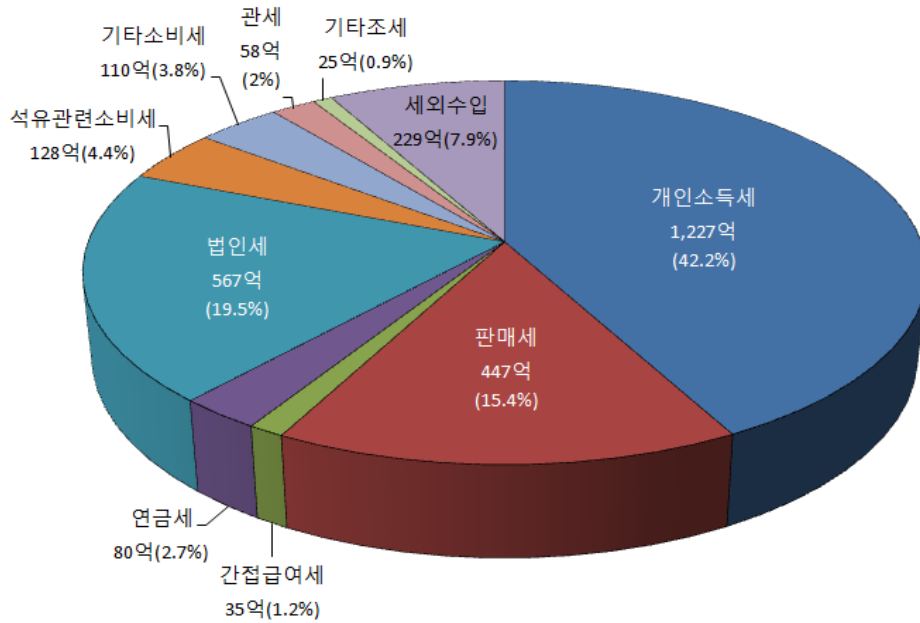
- (에너지·연료) 에너지·연료분야 지출이 84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4.7% 증가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에너지효율주택정책, 청정에너지개발에 대한 재정 투자와 에너지효율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증가에 주로 기인

- (보건) 2009-10년도 보건분야 지출이 512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
 - 의료서비스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 및 준주에 대한 보건 관련 지급의 물가연동 효과 등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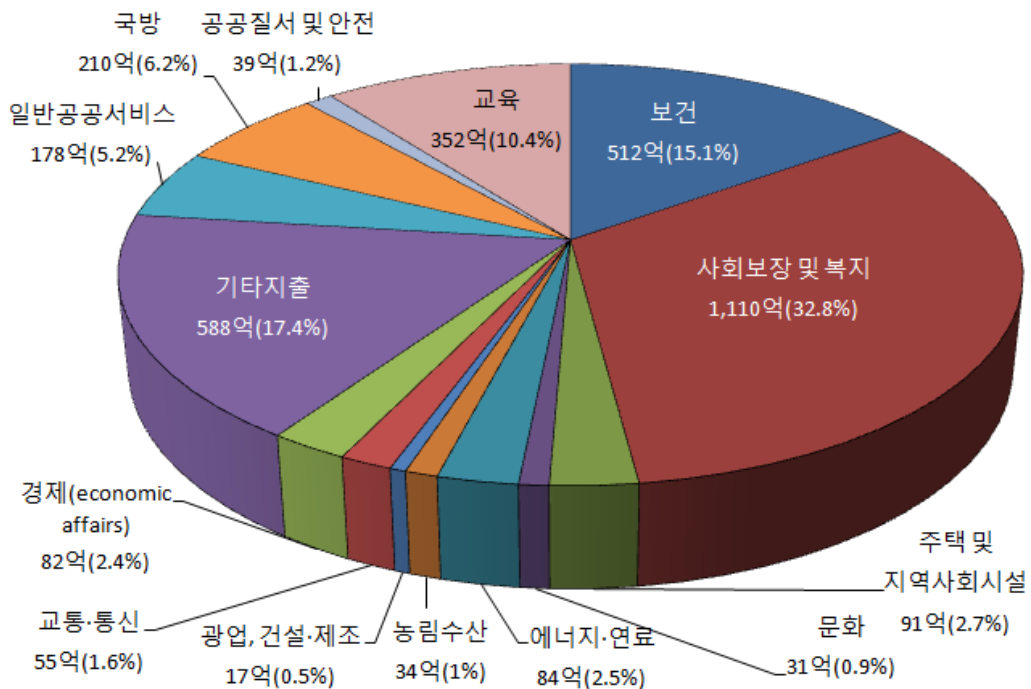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은 1,110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0.9% 감소
 - 2008-09년도에 수행된 경기부양조치로 가계 및 연금수급자들에게 일회성 지원금

(Bonus)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2009-10년도 동 분야 지출 배정액은 감소하나 향후 추계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VII-5] 2009-10 총재정수입 내역



[그림 VII-6] 2009-10 재정지출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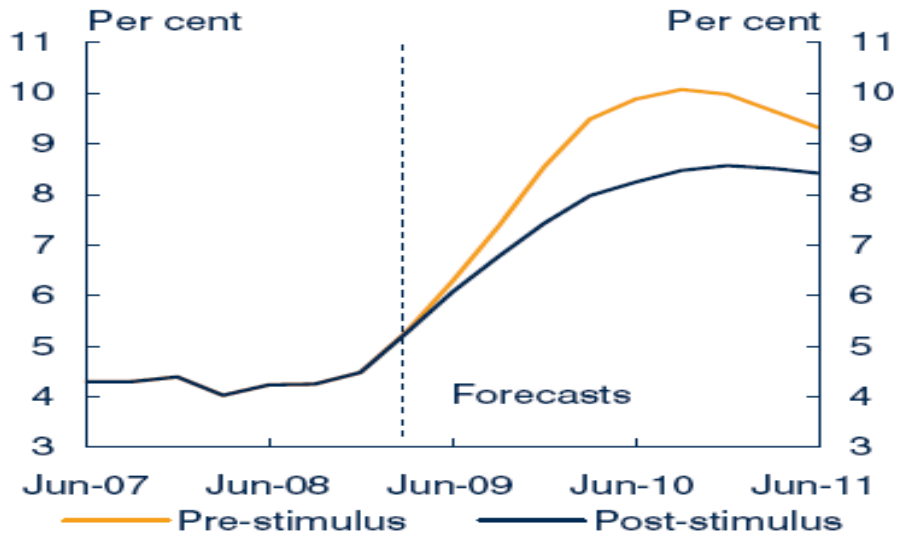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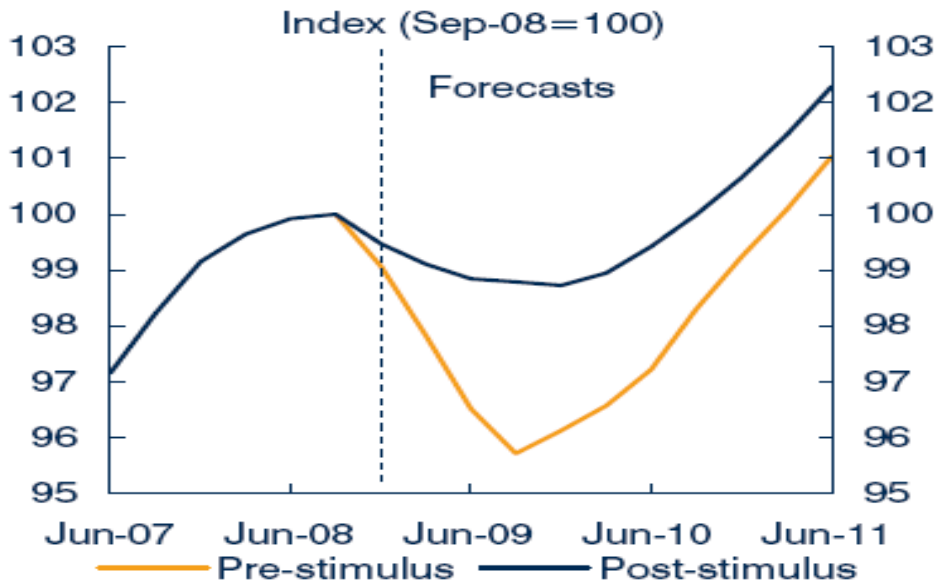
- (2009-10예산안 이전)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총 4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수행하여 2009-10년도에 2.75%p, 2010-11년도에 1.5%p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 104억호주달러(2008-09년도 명목GDP 대비 0.8%) 규모의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발표 (2008. 10. 14)
 - 중·저소득층 및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지원
 - 152억호주달러(GDP 대비 1.2%) 규모의 「지역사회개혁정책(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reform package)」 발표 (2008. 11. 29)
 - 지역사회에 추가자금을 지원하여 보건, 교육, 공공주택건설 등에 투자
 - 장기적인 호주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상반기까지 지원
 - 「국가건설정책(National Building package)」 발표(2008. 12. 12)
 - 도로 및 철도, 교육 인프라 시설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호주경제 강화 도모
 - 420억호주달러(GDP 대비 3.3%) 규모의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발표 (2009. 2. 3)
 - 3차 부양책의 확장정책으로 즉각적인 경기진작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지원

- (2009-10예산안) 금번 예산안의 주안점인 220억호주달러(GDP 대비 1.8%) 규모의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 발표
 - 동 조치로 2009-10년도의 경제성장률을 0.75%p 제고하고 연간 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

[그림 VII-7] 실업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그림 VII-8]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나. 재정건전화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경기회복 시점 이후부터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
 -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 세입원을 확보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19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유지 : 호주정부는 예산안을 통하여 2011/12~2012/13년도 동안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수행
 - 이러한 출구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5-16년도에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다. 고용촉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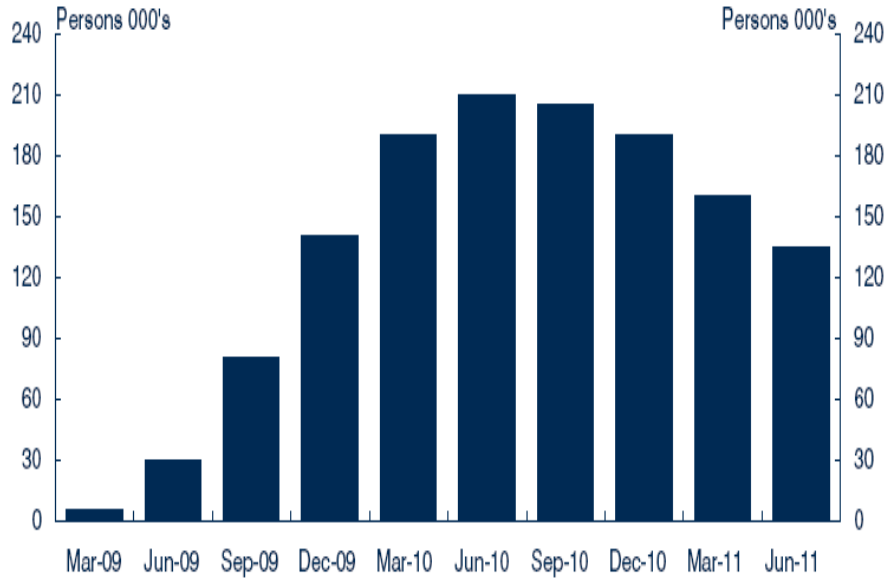
- 2009-10년도 실업률은 6.75%로, '01년(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호주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리해고 및 실업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공약(Jobs and Training Compact)”을 발표하여 2012-13년도까지 약 15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직업훈련지원금(New Training Supplement) 지급
 - 소득보조수급자를 대상으로 2주당 41.6호주달러의 일시적 직업훈련지원금을 통해 승인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승인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 지원금(Education Entry Payment)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현행 208호주달러에서

1,158호주달러로 추가지원

- 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협약(Compact with Young Australians)” 제정
 -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보장
 -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학교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직업을 갖게 함
 - 2015년까지 청소년들의 12년 교육과정 이수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교육훈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경기침체로 실직된 근로자를 위한 “정리해고자 협약(Compact with Retrenched Workers)” 제정
 - 실직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 3억호주달러를 투입
 - 일시적으로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확대하여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와 주요 은행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
- 경기침체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약(Compact with Local Communities)” 제정
 - 6억 5,000만호주달러 규모의 고용펀드(Jobs Fund)를 조성하여 지역내 기간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향상을 도모

□ 현재까지 수행중인 총 5차례의 정부조치로 최대 2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

[그림 VII-9] 정부조치로 지원받은 일자리 규모



[그림 VII-10] 직업교육훈련공약의 자원배분

